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 : 중간일자리 및 중간임금계층을 중심으로*

田炳裕**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 여부를 노동시장에서의 중간계층에 초점을 맞추어서 검증하는 데 있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일자리 분포의 양극화와 임금 분포의 양극화라는 두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중간계층 축소·소멸이라는 쟁점은 실증적으로 지니계수나 10분위 소득배율과 같은 실수지표(scalar index) 분석보다는 빈도분석 방법(frequency analysis)으로 다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도 일자리와 임금계층의 분포를 빈도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중간계층 문제를 다루고자 하였다. 먼저 일자리 분포의 양극화는, 산업 - 직업셀을 하나의 일자리로 보고 각 일자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서열화한 다음 초기 연도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25~75%까지 포괄하는 산업 - 직업셀을 중간일자리로, 그 이상과 이하를 하위일자리 및 상위일자리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임금분포의 양극화는 해당 연도 중위임금(median wage)의 67~133%까지를 중간임금계층으로, 그 이상과 이하를 하위임금계층 및 상위임금계층으로 정의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일자리 분포와 임금 분포의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50%였던 중간일자리는 2006년 41%로 감소하였으며 2000년 47%였던 중간임금계층은 2006년 43%로 감소하였다. 즉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중간일자리 창출이 매우 부진한 속에 노동시장에서 중간계층이 될 만한 소득을 받는 근로자계층의 절대 수가 감소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경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설명하는 가설로 탈산업화론과 노동력공급구조변화론을 검토해 보았다. 우리나라는 고용측면에서 볼 때, 1990년대 초반 이래 제조업 고용비중이 급속히 감소하는 매우 빠른 탈산업화를 경험하였다. 제조업의 경우 중간 일자리 및 중간임금계층의 비중이 서비스업보다 높고, 추세적으로도 중하위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부 상위일자리만 만들어지는 J자 형태의 고용변동이 진행된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 중간일자리가 사라지고 하위 및 상위 일자리가 늘어나는 U자 형태의 고용변동이 진행되었다. 이는 임금분포로 보아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제조업 및 서비스업 내부에서도 부분별로 서로

* 최초심사일(2006년 9월 19일), 최종심사일(2007년 8월 8일)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bycheon@kli.re.kr

다른 형태의 고용변동이 진행되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양극화가 부문 내 변동(within shifts)보다는 부문 간 변동(between shifts)에 의해 초래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인력공급 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청년인력의 감소, 고학력화의 진전 등의 요인을 검토하였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은 지난 10여 년간 완만하게 증가하였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하위 일자리나 하위임금계층으로 집중되지 않았고 중간일자리 및 상위일자리로의 진입도 활발하였기 때문에 전체 노동시장의 양극화의 주요 원인이 되기 어렵다고 분석하였다. 청년층의 경우에도 인력이 절대적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에 청년층의 하위일자리로의 퇴적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지는 않았다. 연령대별 노동시장의 특징을 보면, 기업의 채용감소에 따른 청년층의 중간일자리 감소, 중장년층의 중상위일자리 독점적 유지, 정규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고령층의 하위일자리로의 퇴적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인력공급 구조가 바뀌면서 일어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의 채용, 이직 및 인력 관리 방식의 변화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성·연령대별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서로 다른 고용성격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인력구조의 변화가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그 원인임을 시사한다. 한편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 인력공급 구조 변화의 주요한 특징의 하나가 고학력화이다. 그러나 고학력화가 일자리 수준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전반적인 하향 취업 현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학력화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노동력 공급 구조의 변화보다는 노동력 수요 구조의 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일자리 분포와 임금 분포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자리 내에서도 임금분포의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간일자리에서 중간임금계층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상위일자리에서 상위임금계층의 비중이 더 증가하였고, 하위일자리에서 하위임금계층의 비중이 더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간일 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중간임금소득이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중간일자리 및 중간임금계층의 축소는 저임금일자리 - 근로빈곤층의 문제와 사회적 이동성의 제약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빈곤정책과 사회적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양극화의 원인이 노동력 공급보다는 노동력 수요 측면에 있다는 분석 결론은 교육훈련정책과 같은 노동력 공급 정책도 산업정책과의 긴밀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도 제시한다.

핵심 주제어 : 고용, 소득분배, 불평등, 양극화, 중간계층

JEL 분류번호 : J10, D30

I. 머리말

일반적으로 불평등이나 양극화의 문제는 소득을 경험적인 분석 단위로 활용한 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은 지니계수나 분위별 소득점유율 등 소득분배에 관한 기본적인 통계나 이정우·이성림(2001), 유경준(2003), 성명재(2004) 등의 소득불평등 연구, 최희갑(2002), 신동균·전병유(2005), 신동균·신관호(2007), 유경준(2007) 등의 소득 양극화 연구 등을 통해서 많이 확인되고 있다. 물론 소득불평등의 악화 조짐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0년대 초·중반부터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의 원인이나 외환위기와 소득불평등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현진권·임병인(2004)과 강석훈·박찬용(2003) 등에서 보듯이 소득분배 통계의 원자료와 분석단위, 추정방법 등의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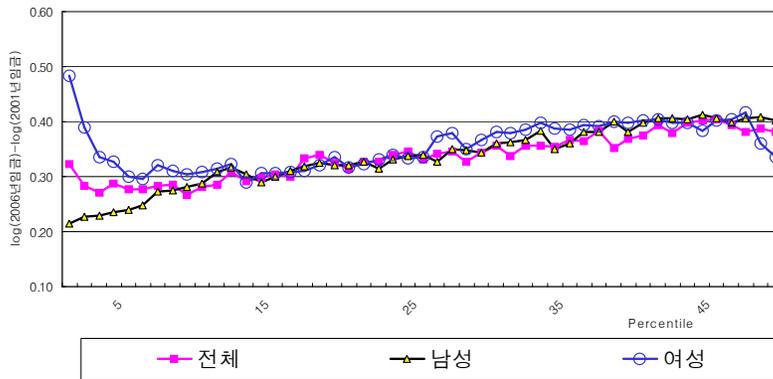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소득에 관한 자료가 비교적 정확한 임금근로자의 임금 분포를 보자. <그림 1>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의 임금변화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의 로그값을 계산하고, 2006년과 2001년의 차이를 2001년 기준 50분위별로 계산해 보았다. <그림 1>에서 볼 때, 뚜렷하게 고임금계층에서 임금이 더 많이 증가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하위 5분위의 로그값의 차이는 0.27 정도로 지난 5년간 명목임금 기준으로 약 35% 상승률을 보인 반면, 상위 45분위의 경우 로그값 차이가 0.40 정도로 약 50%의 임금상승률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화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주로 소득이나 임금 등의 가격 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불평등 문제를 고용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고자 한다. 고용은 소득의 원천이고 소득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고용구조의 변화는 소득구조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불평등 악화의 가장 주된 현상 중의 하나가 중간계층의 축소 및 소멸이라고 할 때 이러한 현상은 고

용구조 변화를 통해서 더 잘 접근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불평등 문제를 노동시장에서의 중간계층에 초점을 맞추어 고용을 중심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을 고용과 임금을 중심으로 하여 검증하고, 양극화가 진행됐다면 그 원인과 관련해서 노동력의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요인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분석 결과가 가지는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고자 한다.

<그림 1> 2001~2006년간 시간당 로그임금의 50분위별 변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01년 및 2006년 8월 부가조사

II. 기존 연구

1. 노동시장에서의 중간계층에 관한 연구

글로벌화와 기술 및 제도 변화를 상대적으로 빨리 경험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우 불평등의 문제는 글로벌화의 문제와 동등한 비중을 가지는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Harrison and Bluestone(1986, 1988)은 미국 사회가 1970년대 후반 이래 불평등이 악화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고 처음으로 지적하고, 이를

‘The Great-U turn’이라고 불렀다. Bloom and Blackburn(1987)이 모든 계층에서 불평등이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Harrison and Bluestone(1986)을 비판하였지만, 1970년대 후반 이후 불평등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이제 모두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이고 그 원인과 관련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평등 논쟁의 시작은 중간일자리 소멸 논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980년대 중반 이래 중간일자리 소멸이 사회적, 학술적 쟁점으로 등장하였고, 이것이 이후 소득불평등 및 임금격차 논쟁으로 확산된 것이다.¹⁾

노동시장에서의 중간계층의 변화에 관한 연구는 일자리와 임금 두 측면에서 이루어졌다. 임금 분포에서 중간 정도에 있는 중간임금계층에 관한 연구와 고용 창출에서의 중간일자리 변동에 관한 연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중간임금계층에 관한 연구가 중간일자리에 관한 연구보다 좀 더 빨리 시작되었다. 이에 관한 연구로는 Lawrence(1984), Bluestone and Harrison(1986), Kusters and Loss(1988), Levy and Murnane(1992) 등이 있다. Lawrence(1984)는 해당 연도 중위임금(median wage)의 67%에서 133% 사이에 있는 임금을 받는 계층을 중간계층으로 정의하고 1969~83년간 풀타임 남성근로자의 주당임금을 분석한 결과, 중간계층이 56%에서 47%로 감소하였고 감소한 일자리의 2/3은 저위일자리로 이동하였고, 나머지 1/3은 상위일자리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Bluestone and Harrison(1986)에서는 1973년의 실질 연봉의 50~200% 수준을 중간계층의 소득으로 정의하고 이 수치를 1979, 1984년에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중간계층 소득 이하를 받는 계층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기존의 불평등 및 양극화 연구를 정리한 Levy and Murnane(1992)도 미국에서 남성의 소득분포 불평등이 양극화의 형태를 띠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79~87년 사이에 연소득 2만 달러 이하와 4만 달러 이상의 남성근로자 비중이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임금분포상의 중간계층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중간임금계층이 줄어드는 양극화된 추세를 확인하였지만, Kusters and Loss(1988)는 Bluestone and Harrison(1986)의 연구가 경기고점과 경기저점을 비교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하고 분석 대상 연도를 변경할 경우 고위임금계층의 증가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1) 학술적 연구는 아니지만 이미 1980년대 초에 Kuttner(1983)는 미국경제가 중간일 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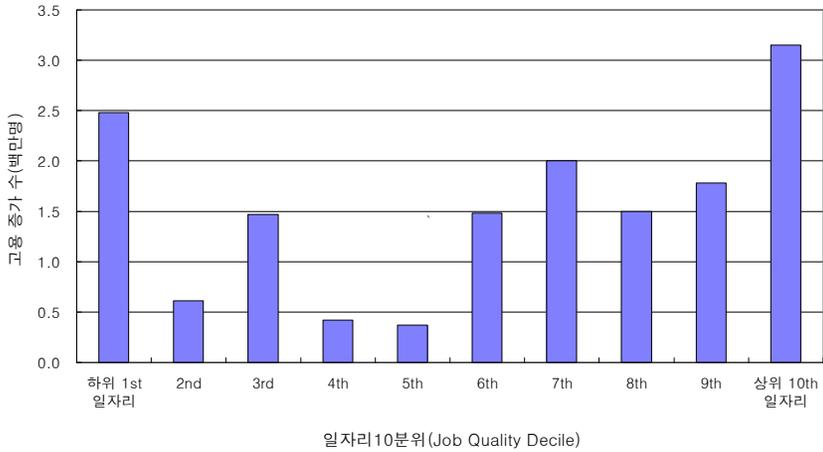
앞의 연구들이 주로 소득 분포 상의 위치에 따라 중간계층을 정의하고 그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는 중간임금계층에 관한 연구라면, 다른 한편으로 일자리 분포의 변화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즉, 일자리 자체에 주목하여 일자리를 서열화하고 그 분포의 변화를 분석하는 고용창출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로는 U.S.Council of Economic Advisors(1996), Acemoglu(1999), Wright and Dwyer(2003), Ruth and Dwyer(2002), Auto-Levey-Murnane(2003), Spitz(2005), Autor, Katz, Kearney(2006), Goos and Manning(2007) 등이 있다. 이들이 사용한 방법은 산업 - 직업 셀을 하나의 일자리 단위로 보고 이 일자리에 분포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이나 중간임금을 일자리 질의 기준으로 하여 일자리를 10분위, 또는 5분위, 3분위 등으로 서열화하여 분석하였다.

U.S. Council of Economic Advisors(1996)의 경우 미국에서 상위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지만, 나머지 연구들은 미국 경제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었던 1990년대에 중간일자리가 감소하고 하위 및 상위 일자리가 증가하는 일자리 양극화 현상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Acemoglu(1999)는 미국 노동시장에서 중간일자리가 사라지고 양 극단의 일자리로 대체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상위 25%와 하위 25%의 일자리의 합이 1983년 35.2%에서 1993년 37.6%로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Autor, Katz, Kearney(2006)도 미국에서 1980년대와는 달리 1990년대에 고용창출구조가 양극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Ruth and Dwyer(2002), Goos and Manning(2007), Spitz(2005) 등은 미국, 영국, 독일에서 고용창출의 양극화 구조를 비슷한 방법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2>에서 보면, 미국, 영국, 독일 모두 상위 및 하위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중간일자리가 줄어드는 고용창출구조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중간소득 계층과 중간일자리가 줄어드는 경향을 확인하고 있다. 1970년대 후반 이후 노동 시장이 일자리와 임금소득 두 측면에서 모두 양극화하는 현상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커다란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원인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가설과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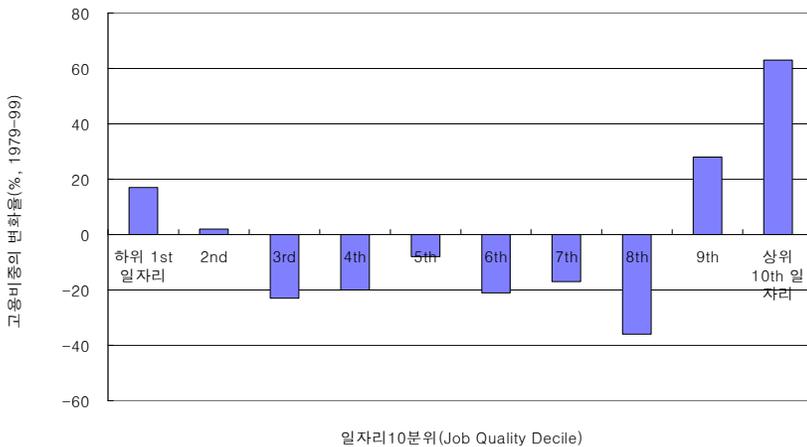
<그림 2> 국가별 고용 창출 구조에 관한 분석 결과

(미국) 일자리 분위별 고용 증가 수(풀타임근로자, 18~64세, 1992~20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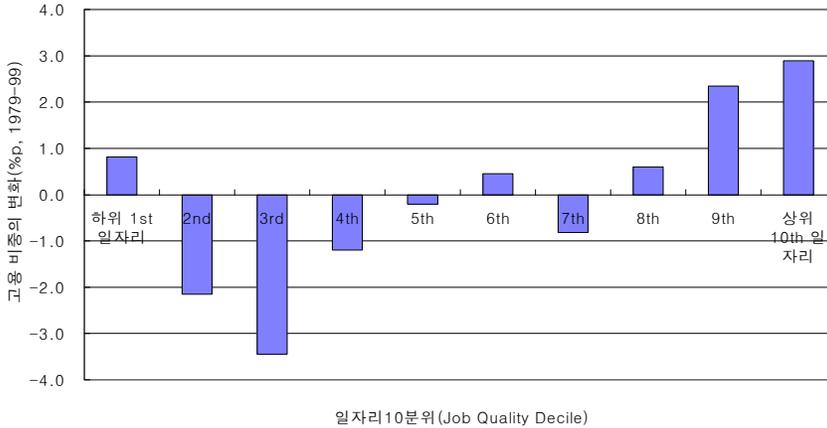
자료 : Ruth and Dwyer(2002)

(영국) 일자리 분위별 고용비중의 변화율(1979~1999년)



자료 : Goos and Manning(2007)

(독일) 일자리 분위별 고용비중의 변화(1979~1999년)



자료 : Spitz(2005)

2. 양극화와 불평등의 원인에 관한 기존 연구

일자리 및 임금 분포의 양극화라는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은 불평등의 문제를 소득불평등이나 임금격차와는 다른 시각에서 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도 넓은 의미에서의 소득불평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간임금계층이나 중간일자리의 축소라는 양극화 현상의 원인에 관해서도 소득불평등과 임금격차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들과 같은 맥락에서 검토해 볼 수 있다.

불평등 확대의 원인으로 간주되는 요인들은 노동의 수요 측면, 노동력의 공급 측면, 그리고 제도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노동의 수요와 관련된 요인들은 탈산업화, 숙련편향적 기술변화, 기업의 인사전략의 변화 등을 들 수 있고, 노동력의 공급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여성이나 청년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가 대표적이며, 제도적 요인으로는 노조의 영향력 감소나 노동시장 법제도의 유연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노동의 수요 측면을 강조하는 가설들에 대해서 검토해 보자. 중간소득계

층이 줄어들거나 중간일자리가 감소하는 원인에 대한 대표적인 수요 측면의 가설이 탈산업화이다. Bluestone and Harrison(1986)이 중간소득계층의 축소·소멸을 이야기했을 때 그 원인으로 지목했던 것이 탈산업화였다. 제조업에서는 지속적인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저학력계층에게도 상대적인 고임금을 제공하는 중간일자리가 창출되지만 서비스업 고용에서는 저임금일자리와 고임금일자리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이행은 고용 구조의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조업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낮은 임금 분산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개방, 외주하청, 공장이전, 합리화, 자동화 등으로 인한 제조업 일자리 감소와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는 임금소득의 불평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고용의 양극화와 임금불평등이 탈산업화(서비스경제로의 이행)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은 대단히 많다. Murphy and Welch(2000)는 1980년대에 저학력 계층의 소득이 감소한 것은 제조업 관련 제품의 수입 증가로 인하여 노동수요 곡선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교육프리미엄의 증가와 저학력층의 임금 하락이 탈산업화 아이디어를 지지한다는 것이다. Bound and Holzer(2000)도 노동수요가 제조업으로부터 여타 부문으로 이동한 것이 저숙련 남성의 소득과 고용을 크게 감소시킨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분석하였고, Juhn(1999)도 미국에서 1980년대에 와서는 임금분포 상으로 90분위와 10분위 계층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제조업 블루칼라와 같은 중위임금 영역의 감소가 임금불평등을 높였다고 분석하였으며, Borjas and Ramsey(1995)도 제조업의 중간일자리 감소가 임금불평등을 심화하게 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한편, 서비스업 부문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양극화 및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많다. Nielson and Alderson(1997)과 McLaughlin(2002) 등은 서비스 부문의 고용 증가가 불평등 증가와 연관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Levy(1987)도 80년대 이후 미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특히 남성들에게 더 불평등한 소득분배로 이어졌고, 이는 고임금이고 더 평등주의적인 제조업일자리가 저임금이고 더 불평등한 서비스 관련 일자리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탈산업화론에 대한 대표적인 비판 논점은 산업 내에서 중간일

자리 소멸이나 임금격차의 확대 등이 더 크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중간일자리 감소나 임금불평등 악화가 산업 내에서(within industries) 더 강하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제조업 내에서도 반숙련 중간일자리는 전체 제조업 일자리보다도 더 빠르게 줄어든 것이다. Blackburn and Bloom(1987)은 전체 임금불평등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산업구조 변화가 설명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고 분석하였으며 Tilly, Bluestone and Harrison(1986)도 임금격차의 78%는 산업 내 불평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즉 중간일자리 감소와 임금불평등 확대는 서비스경제로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산업 내 중간일자리 상실이나 임금격차 확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수요 측면의 연구 가설이 숙련편향적 기술변화(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이하 SBTC) 가설이다. SBTC 가설은 기술이 숙련을 더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고숙련·고임금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진다는 것이다. 그 결과 고용 변동은 상위일자리 또는 상위임금계층의 비중을 크게 하는 J자 형태의 고용창출 구조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연구 가설에 대한 검증은 Berman, Bound and Griliches(1994)를 비롯한 많은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Paul Krugman은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수많은 연구 결과를 종합한 결과, 기술 변화가설이 대세가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지만, 숙련편향적 기술변화 가설에 대한 비판적 연구도 적지 않다.²⁾ 특히 Autor et. al.(2003)는 불평등 확대를 단순히 숙련편향적 기술변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가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기술변화가 단순히 SBTC 형태만으로 전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컴퓨터에 기반한 기술변화가 단순히 상위일자리를 늘리고 하위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는 하위일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제조공장의 생산직이나 사무실의 사무직 등 중간일자리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컴퓨터기반기술은 주로 전통적인 중간일자리였던 일상적인 사무노동(routine cognitive tasks, 주로 사무직

2) Card and DiNardo(2002)는 SBTC 가설의 문제 중의 하나는 1990년대에도 컴퓨터기술의 진보는 지속되었지만, 불평등이 오히려 안정화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SBTC는 성별, 인종별 임금격차나 연령대별 교육수익률의 차이가 확대되는 것 등을 잘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였다.

원이나 은행직원)을 대체하고, 비일상적인 지식노동(non-routine cognitive tasks)을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식당의 웨이터와 같은 비일상적인 육체노동(non-routine manual tasks)은 대체하지 못하는 성격의 기술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기술변화는 상위일자리의 비중을 늘리는 J자 형태의 고용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U자 형태의 일자리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는 Autor et. al.(2006)에서도 다시 재검토되고 있다. 또한 Acemoglu(1999)도 단순한 SBTC가 아니라 SBTC와 숙련인력공급이 상호작용하여 기업의 노동수요의 균형을 바꾸는 과정에서 중간일자리 상실과 임금불평등 확대가 나타난다는 논리를 분석적으로 검증하였다. 숙련노동력의 공급 증가와 숙련편향적 기술진보가 기업으로 하여금 숙련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도록 함으로써 불평등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노동력과 기술의 숙련 수준이 높아질수록, 숙련노동력과 불숙련노동력에게 모두 중간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던 방식(pooling equilibrium)에서, 숙련노동력에게는 숙련일자리를 불숙련노동력에게는 불숙련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separate equilibrium)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자리 구성의 변화는 고숙련에게 고임금을 저숙련에게 저임금을 제공하는 결과로 나타나 임금불평등이 확대된다는 것이다.³⁾

한편, 노동수요측 요인과 관련해서는 기업들의 고용전략 변화가 고용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가설도 있다. 글로벌화와 기술변화 등 경영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들은 끊임없이 구조조정 압박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인사전략도 정규직 중심에서 비정규직 중심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주요 대기업들은 일부 상위일자리에 정규직을 남겨두고 나머지 하위일자리는 모두 비정규직을 활용하거나 아웃소싱을 하는 형태로 전환한다. 그 결과 고용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하청기업 등으로 양극화된다는 것이다. Harrison and Bluestone(1990)은 경기변동과 인구학적 변화라는 소득불평등에 관한 전통적인 설명이 불평등의 변화를 다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고용관리관행에서의 혁신에 따른 고용·임금관계의 재구조화와 유연화의 증대를 소득불평등의 중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3) 이는 숙련 공급의 증가가 숙련에 대한 보상을 줄여 불평등을 완화한다는 전통적인 논리와는 다른 것이다.

이상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기술변화, 기업의 인사관리전략의 변화 등 노동 수요 측면의 대표적인 가설과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노동 공급 측면의 연구들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노동 공급과 양극화·불평등의 관계를 보는 가설의 기본 논리는 여성이나 청년 등 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가 저위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저임금계층을 확대한다는 가설이다.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확대되고 여성인력이 저임금직종으로 진출하면서 일자리 양극화 및 임금불평등이 확대되었다는 가설이다. 여성은 일반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낮은 임금을 받고 노동시장 경험이 짧으며 파트타임일자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는 저숙련 일자리의 임금 저하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Kuhn and Robb(1995)나 Blau and Kahn(1996) 등은 여성들이 주로 저임금직종의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저임금직종의 경쟁이 심화되고 임금이 하락하여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초래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이러한 노동공급 가설은 청년층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Lawrence (1984)는 탈산업화 가설을 비판하면서 노동공급의 연령구조 변화가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불평등 확대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미국에서 70년대 후반 이후 중간임금계층의 감소를 확인하면서 산업구조의 변화(sector shifts)만이 이러한 변화를 초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중간임금계층의 비중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하이테크 부문에서 중간임금계층의 비중이 적고 양극화된다는 가설도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제조업에서의 일자리감소가 중간임금계층의 감소로 이어진다는 가설은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는 중간일자리 감소는 노동력의 연령 구조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고 분석하였다. 베이비붐 세대 젊은 층의 대대적인 노동시장 진입,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고 임금분산이 매우 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중간일자리 비중 감소를 초래하였다고 보았다. 고용창출의 양극화는 대규모의 베이비붐세대들이 노동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일자리(entry-level jobs)가 저임금일자리이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Harrison and Bluestone(1990)은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라는 인구학적 설명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단기간에 경험이 없는 청년층이 대거 노동시장으로 진입하여 소득불평등과 저임금계층이 일시적으로 확대될지라도, 이

들이 점차 경력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서 중·장년층의 대체제가 될 경우 이러한 일시적 효과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Lawrence(1984)의 전망은 실제로 맞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중간계층의 감소라는 양극화와 임금불평등의 확대를 설명하는 다양한 요인들과 가설들을 선진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여기서 검토하지 못한 가설로 노동조합의 약화나 노동시장 법·제도 변화와 같은 제도 변화와 관련된 가설들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 가설들은 실증적으로 직접 다루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노동의 수요와 공급 측면 가설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탈산업화론과 취약계층의 노동공급 확대론을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다음 절에서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3. 우리나라의 기존 연구

우리나라의 경우 양극화와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와 논쟁은 많지 않은 편이다. 특히 노동시장의 중간계층에 대한 연구는 더욱 빈약하다. 그동안 중간계층과 관련된 연구로는 중간계층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나 가구 단위의 자료를 활용하여 중산층의 규모를 추정하는 연구 그리고 양극화 지수(polarization index)의 추정을 통해 중산층 감소를 실증하는 연구들이 있다. 한상진(1987), 조돈문(1994) 등이 전자의 연구라면, 이정우·이성림(2001), 최희갑(2002), 신동균·전병유(2005), 김영옥·민현주·김복순(2006), 신관호·신동균(2007), 유경준(2007) 등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연구가 주로 노동시장에서의 일자리와 임금 분포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후자의 연구들과 더 연관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이정우·이성림(2001)은 여러 가지 기준으로 중산층의 규모를 추정하였는데, 본 연구와 동일한 기준인 중위소득의 66.7%와 133.3% 사이에 있는 계층을 중산층으로 보고 그 규모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중산층의 규모는 1993년 43.95%에서 1998년에 35.92%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의 충

격으로 중산층 규모가 크게 감소하였고 상위와 하위로 양극화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신동균·신관호(2007)의 경우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소득분포의 양극화가 진전되면서 중산층의 규모가 감소했으며, 특히 1997~1998년의 경우 감소 규모가 가장 컸고, 줄어든 중산층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양 방향으로 이동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최희갑(2002)과 신동균·전병유(2005)도 중산층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분포의 양극화 지수를 추정함으로써 중산층 규모 축소를 실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가구단위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였기 때문에, 노동시장 내에서 직접적으로 중간계층의 변동을 파악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동시장 내에서의 중간계층을 연구하고, 이를 일자리와 임금소득 분포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점에서 양극화와 불평등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Ⅲ. 분석방법과 자료

1. 분석방법

불평등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주로 지니계수나 십분위배율 등 소득분포 지표나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 지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서서도 검토했듯이 불평등 논쟁은 노동시장에서의 중간계층 축소라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즉 양극화의 관점에서 접근이 이루어진 것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양극화 문제는 지니계수와 같은 전통적인 불평등 지표나 임금격차와 같은 지표만으로는 다룰 수 없는 문제이다. 지니계수나 소득십분위 지표와 같은 실수지표(scalar measure)가 매우 보편적으로 활용되기는 하나, 중간계층 축소나 양극화와 같은 현상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Esteban and Ray(1994), Wolfonson(1997), Prieto et. al.(2003)에서처럼 소득불평등과는 다른 개념에 근거하여 양극화를 계량화한 지수를 구성하고 분석하

는 경우도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양극화 지수(polarization index)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희갑(2002), 신동균·전병유(2005), 신관호·신동균(2007), 유경준(2007) 등은 우리나라 자료를 가지고 양극화 지수를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극화 지수를 통한 분석도 노동시장에서의 중간계층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양극화나 중간계층 축소의 문제는 주로 빈도(frequency) 분석에 의존한다. 실수지표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기 위해 절대적 또는 상대적 범주를 가지는 빈도지표(frequency measures)를 통해 중간일자리 또는 중간임금계층을 정의하고 그 추세를 보는 것이다. 그러나 역으로 이러한 지표는 일반적인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데 적합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특정 범주 내에서의 소득 변동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빈도분석으로는 저소득층으로 이미 분류되어 있는 저숙련근로자들의 소득 변동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빈도분석 방법의 또 하나의 한계는 모델링과 가설검증이 어렵다는 점이다. 중간일자리나 중간임금계층의 축소에 대해 그 현상을 설명하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 원인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연구가 많다. 이 때문에 중간일자리나 중간임금계층의 변동을 주로 부문별, 계층별로 나누어서 검토하는 방법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다.

빈도분석이 가지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중간층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빈도분석이 가지는 장점을 충분히 활용하고자 한다.

빈도분석을 통해 노동시장의 중간계층의 추이를 보고 고용과 임금소득에서의 양극화를 보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임금 분포를 서열화하고 그 중의 일정 부분을 중간계층으로 정의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먼저 임금양극화와 중간임금계층에 관한 빈도 방법을 보자. 중간임금계층 정의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소득분포의 중간 정도에 있는 계층으로 정의하는 방법이다. 실증적으로는 중위임금(median wage)의 특정 배수 이상과 이하를 중간임금계층으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 경우 임금분포의 양극화는 실질임금 수준과 관계없이 중간임금계층의 감소를 초래한다. 이는 상대적 빈도지표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중산층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임금을 받는 계층으로 정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일정 수준의 임금을 받는 계층의 비중에 관심을 가

지게 된다. 이는 소득불평등도에 좌우될 뿐만 아니라 소득의 증가속도와도 관련된다. 소득불평등이 증가하더라도 실질소득의 증가속도가 빠르다면 중간계층은 증가할 수 있다. 즉, 실질소득의 분포 자체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표는 절대적 빈도분석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앞에서 검토한 기존 연구에서 Lawrence(1984)가 첫 번째 방법을 사용했다면, Bluestone and Harrison(1986), Kusters and Loss(1988), Levy and Murnane(1992) 등은 후자의 방법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Lawrence(1984)가 개별 연도를 기준 연도로 하는 상대적 빈도지표를 사용하였다면, Bluestone and Harrison(1988)은 분석 대상 초기 시점을 기준 연도로 하는 절대적 빈도지표를 사용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빈도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연도 중위 임금의 67%에서 133%까지를 중간임금계층으로 정의하고 그 이하와 이상을 하위임금계층, 상위임금계층 등으로 구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일자리 양극화와 중간일자에 관한 빈도 분석을 보자. 앞의 기존 연구에서도 검토했듯이 산업과 직종으로 구분되는 셀들을 일자리로 정의하고 각 셀에 존재하는 근로자들의 평균임금, 중간임금 또는 교육수준 등으로 개별 일자의 질을 평가하여 서열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산업 - 직업 셀을 하나의 일자리 단위로 보고 각 일자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의 평균값이나 중위값을 일자의 질의 기준으로 삼아서 일자리를 서열화한 다음, 이를 분석 대상의 초기 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10분위(또는 5분위, 4분위, 3분위 등)로 나누고 이 분위별로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의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먼저 예를 들어, 운수장비업(산업 2자리분류 35번)의 기계조작조립원(직종 2자리분류 83번)을 하나의 일자리로 본다. 그리고 이 일자리는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에 따라 전체 일자리 서열에서의 위치가 결정된다. 이렇게 형성된 전체 일자리 서열을 분석대상 초기 연도의 근로자 분포에 적용하여 25~75% 사이에 있는 일자리(산업 - 직업셀)를 중간일자로 정의하고, 그 이하와 이상을 하위일자리, 상위일자리로 정의한다. 이렇게 일자리 계층이 정해진 다음, 이를 기준으로 하여 고용 변동을 측정한다.

이러한 분석 방법론도 물론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임금 수준만으로 일자리 질의 지표로 삼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임금 수준은 고

용안정성이나 교육훈련가능성과 같은 다른 일자리의 질을 나타내는 지표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고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가장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자리 자체의 내용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그러나 일자리의 서열 구조 자체가 10여년 사이에 급격하게 변화하지는 않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자리 분석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중간임금계층과 중간일자리란 한 개인에게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개별 일자리 범주 내에서도 중위임금을 중심으로 소득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개인들의 경제적인 삶의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의 조건에 연구 관심이 있다면 개인의 소득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연구방법이 적합할 것이다. 그럼에도 굳이 개인소득(individual earnings) 이외에 소득으로 지수화한 일자리(earnings-indexed jobs)를 연구하는 이유는 나름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산업 - 직업 셀은 어떤 경제가 만들어내는 일자리의 실질적인 내용과 범주를 다룰 수 있다. 일자리는 단순히 주어진 소득에 일을 하기로 하는 계약만은 아니고 특정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특정한 업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 확대에 따른 소득창출의 잠재력은 개인소득보다는 일자리범주의 확대로 더 잘 파악될 수 있다. 일자리는 특정한 소득 잠재력을 가진 특정한 종류의 고용에 대해 노동시장이 제공하는 기회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 산업의 전문직의 경우, 이 분야의 많은 근로자가 그 분야의 중간임금 이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높은 소득창출 잠재력을 제공하는 일자리 기회로 볼 수 있다. 또한 연공형 임금체계를 가진 일자리가 크게 증가할 경우, 새로 고용된 젊은 근로자는 중간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지만 향후 더 높은 소득을 받을 잠재력과 기회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산업 - 직업셀을 통한 일자리 분석은 고용창출의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더 잘 나타낼 수 있다. 물론 어떤 지표가 다른 지표에 비해서 더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는 것은 아니다. 두 지표 모두 불평등과 관련해서 의미 있는 지표들이고 단지 연구의 접근 방법이나 분석 결과가 시사하는 의미가 다를 뿐이다(Wright and Dwyer 2003, p.295).

본 연구도 우리나라에서의 노동시장의 불평등 문제를 일자리와 임금분포의 양극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기 때문에 분석 방법은 실수지표 분석보다는

빈도분석에 의존할 것이다. 이 경우 중간일자리 감소의 원인을 엄밀하게 논증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중간일자리나 중간임금계층의 감소가 산업구조 변화나 노동력의 인구학적 변화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다.

2. 자료

가. 일자리 분포 측정 자료

일자리 양극화나 임금 양극화에 관한 빈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와 임금소득에 관한 대표성 있는 정확한 자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임금소득분포에 관한 대표성 있는 완벽한 자료가 부족하다. 노동부가 『임금구조기본조사』에서 임금을 조사하고 있고, 통계청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 2000년부터 임금근로자의 지난 3개월간의 임금소득을 조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임금구조기본조사』는 제조업과 대기업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기에는 불완전한 자료이고,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의 경우 전체 근로자 대표성은 있지만, 2000년 이전에는 임금소득이 조사되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가구조사이기 때문에 임금소득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기간은 1993~2006년으로 하였다. 따라서 기초 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고려하여 분석 대상 자료를 재구성하였다.

먼저 일자리 양극화를 보기 위한 자료 구성을 보자. 일자리 분포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일자리 분포에 관한 대표성 있는 자료와 일자리를 서열화하기 위한 정확한 임금소득 자료가 필요하다.

분석 대상 기간 동안 일자리의 서열 구조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산업 - 직업셀 단위의 일자리를 서열화하기 위한 임금 수준 측정은 분석 대상 초기 연도인 1993년 자료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분석 대상 기간의 중간 연도인 1999년이나 2000년 자료를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이며, 전체 연도의 평균자료를 가지고 측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금에 관한 대표성 있는 자료는 2000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이후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2000~2006년

간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또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가 임금에 관한 조사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2000~2006년 7년간의 평균임금을 사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산업 2자리와 직업 2자리의 일자리 셀의 수는 51개 중분류 산업(표준산업분류 2자리)과 26개 중분류직종(표준직업분류 2자리)으로 구성된 964개였고, 7년간의 자료를 활용하여 964개 일자리 셀의 평균시간당 임금(소득⁴)을 구하였다. 개별 연도의 임금은 소비자물가지수를 활용하여 2005년도 불변가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구한 일자리별 평균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964개 일자리를 서열화하였다. 그런데, 964개의 산업 - 직업셀 중에서 1993년부터 2006년까지 매칭이 가능한 산업 - 직업셀은 837개로 나타났기 때문에 127개 일자리는 제외하였다. 그러나 제외된 산업 - 직업셀이 근로자수가 매우 제한적인 셀들이어서 표본의 대표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활용된 837개의 산업 - 직업셀(일자리) 중에서 가장 중간에 있는 셀(일자리)인 산업20*직종83(목재나무제조업의 기계조작조립원)의 시간당 임금은 2005년 기준으로 7,686원, 가장 하위 셀(일자리)인 산업61*직종92(수상운수업의 농림어업관련 단순노무직)의 시간당 임금은 1,868원, 가장 상위 셀(일자리)인 산업23*직종12(석유정제업의 법인관리직)의 시간당 임금은 42,352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서열화된 일자리셀을 기준연도인 1993년의 근로자 분포에 따라서 중간일자리, 하위일자리, 상위일자리로 구분하였다. 즉, 2000~2006년 자료의 임금 소득에 기초하여 서열화된 산업 - 직업 일자리셀에 1993년 근로자수를 대입하여 전체 근로자를 서열화하고, 이 서열화된 근로자의 25~75%를 포괄하는 산업 - 직업셀을 중간일자리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일자리별 근로자수가 정확하게 25%, 75%로 잘라지지 않기 때문에 23.4%와 75.5%에서 구분되었다. 23.4% 이하의 일

4) 중위임금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산업 - 직업셀에 표본수가 제한적인 경우 중위 임금을 의미 있게 계산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중위임금으로 분석할 경우에도 분석 결과에는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7년간 산업 - 직업셀의 조사근로자수가 모두 10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할 경우 분석 대상이 되는 산업 - 직업셀이 206개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직업셀이 포괄하는 근로자수는 전체 근로자수의 90% 정도이다. 이 경우, 2000년부터 중간일자리비중이 약간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그러나 중위일자리의 기본적인 추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부록 그림 1> 참조).

자리를 하위일자리, 75.5% 이상의 일자리를 상위일자리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일자리 특성을 <표 1>에서 보면, 하위일자리 셀은 162개, 중간일자리 셀은 321개, 상위일자리 셀은 354개이며, 중간일자리는 2005년도 시간당 임금기준으로 5,064~8,603원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나타낸다. 중간일자리에서 가장 큰 규모의 셀은 건설업 부문의 기능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의된 일자리 구분 기준을 1993~2006년간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에 적용하였다.⁵⁾ 우리는 이 자료를 ‘일자리범주자료’로 부르기로 하였다. 뒤에서 분석되는 일자리 분포의 변화는 이 ‘일자리범주자료’에 기초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한편, 우리 분석에서는 농림어업 및 광업 부문, 공공행정 부문 그리고 파트타임 등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농림어업 및 광업 부문은 계절적인 성격이 강하여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가 대표성 있게 반영하기 어려우며, 공공행정 부문의 경우 뒤에서 같이 사용할 『임금구조기본조사』의 자료에서 이 부문에 대한 충분한 임금소득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파트타임도 제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트타임 비중은 선진국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1993년 702천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5.9%에서 2006년 1,633천명 10.5%로 그 비중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⁶⁾ 따라서 고용창출 구조의 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파트타임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파트타임의 경우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파트타임 일자리의 내용과 성격을 임금소득만으로 정의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파트타임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물론 분석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검증하기 위하여 파트타임을 포함하여 분석도 해 보았으나(<부록 그림 1> 참조), 전반적인 분석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일자리범주자료’의 경우, 127개의 산업 - 직업셀이 제외되었음에도 1993년에 분석대상으로 정의된 임금근로자 10,451천명 중에서 10,419천명인 99.7%가 분석

5) 한편 2000년에 산업, 직업 분류체계가 변화가 있었다. 구분류와 신분류를 2자리 분류수준에서 완벽하게 연결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선에서 구분류와 신분류를 연계하도록 하였다.

6) 미국의 경우 90년대에 풀타임 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이 증가하였다. 파트타임 비중은 1992년 18.2%에서 2000년 16.2%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표본으로 파악되었으며, 2006년에 12,864천명 중에서 12,804천명으로 99.5%가 분석 대상으로 잡혔다. 이는 제외된 셀이 포괄하는 근로자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1> 각 일자리 분위별 일자리의 특성

	셀 수	고용수가 많은 5개 셀		1993년 고 용 (천 명)	2006년 고 용 (천 명)	시간당 임 금	임 금 분 포
		산업 2자리	직종 2자리				
하 위 일자리	162	55(숙박음식업)	51(대인보호서비스)	474	717	4,117	5,063 이하
		52(소매업)	52(판매서비스)	367	543	4,483	
		18(의복업)	82(기계조작조립)	155	7	4,833	
		18(의복업)	74(기타기능원)	154	119	4,395	
		17(가죽신발업)	74(기타기능원)	109	26	4,331	
중 간 일자리	321	45(건설업)	71(건축기능원)	523	435	6,556	5,064 ~8,602
		45(건설업)	93(건설단순직)	345	201	5,078	
		60(육상운송업)	83(운전원)	325	279	5,930	
		32(영상장비제조)	82(기계조작조립)	159	160	5,780	
		51(도매업)	41(일반사무직)	132	205	7,593	
상 위 일자리	354	80(교육서비스)	23(교육전문가)	353	541	11,048	8,603 이상
		65(금융업)	42(고객봉사사무직)	173	105	9,396	
		65(금융업)	41(일반사무직)	67	121	11,597	
		51(도매업)	34(기타전문가)	67	142	10,657	
		80(교육서비스)	41(일반사무직)	65	129	9,148	

주 : 근로자 수가 많은 셀은 1993년 기준. 시간당 임금과 임금분포는 2000~2006년도 평균치의 2005년도 불변가격 기준

나. 임금 분포 측정 자료

다음으로 중간임금계층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를 보자. 앞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임금분포에 관한 대표성 있는 완벽한 자료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표성이 있고 2000년 이후 임금소득을 조사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2000년 이전의 추세를 보기 위해서 『임금

구조기본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를 결합한 자료를 부가적으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2000년 이전의 추세를 보기 위해서 『임금구조기본조사』자료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임금소득 조사라는 장점과 『경제활동인구조사』가 가지고 있는 근로자 대표성이라는 장점을 결합하고자 한 것이다. 즉 『임금구조기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성, 연령, 학력, 직종 2자리, 산업 2자리 및 종사상지위에 따른 평균임금소득을 구해서 이를 같은 기준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에 결합하였다. 예를 들어, 『임금구조기본조사』에서 남성, 15~29세, 고졸로 산업 35(운수장비업)과 직종 83(기계조작조립원)에 상용직으로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동일한 그룹의 평균임금으로 결합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연령은 15~29, 30~49, 50세 이상으로 3개 범주로 구분하였고, 학력은 대졸이상, 전문대졸, 고졸이하 등 3개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종사상지위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임금구조기본조사』의 경우 2002년부터는 종사상지위 변수를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1993~2005년까지 종사상지위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임금소득을 성·연령·학력·직종·산업별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결합하였다. 여기서는 이를 ‘임금소득자료(1)’로 부르기로 한다. 한편, 1993~2001년까지 종사상지위까지를 고려하여 계산한 평균임금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결합한 자료를 ‘임금소득자료(2)’로 부르기로 한다.

이 자료의 경우에도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농림어업 및 광업, 공공행정부문, 파트타임 등을 제외하였다. <표 2>에서는 제시된 분석 대상 자료의 표본수가 제시되어 있다. ‘임금소득자료(1)’을 보면, 1993년의 경우, 전체 임금근로자수 11,944천명 중 10,451천명이 분석기준에 해당되었고 이 중에서 『임금구조기본조사』에서 계산한 임금소득의 결합이 가능한 근로자수는 10,419천명이었다. 2005년의 경우에도 각각 15,185천명, 12,569천명, 12,513천명 등이다. 매년 전체 근로자의 85% 정도가 분석 대상으로 포괄되었고 이 중 대부분이 분석이 되었다. ‘임금소득자료(2)’의 분석대상 근로자수는 1993년 10,357천명으로 ‘임금소득자료(1)’과 큰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의 경우 2000년에 10,618천명, 2006년에 11,280천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전반적으로 여타 자료에 비해서 표본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가 8월에

조사되기 때문에 청년층 파트타임의 비중이 높는데 이 부문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임금소득의 분석 기준은 시간당 임금으로 하였다.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지난 3개월간 월평균임금을 월노동시간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고, 『임금구조기본조사』에서는 월정액급여와 월할상여금을 월정규근로시간으로 나눈 값을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여금이 거의 임금과 같은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월임금소득에 포함시켰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중간임금계층은 매년 중위임금(median wage)의 67%와 133% 사이에 있는 계층으로 정의하였다. <표 3>에서 볼 때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사용할 경우, 2000년에 시간당 임금총액의 중위값이 5,235원이고 이것의 0.67과 1.33배인 3,508원과 6,956원 사이에 있는 근로자가 중간임금계층이라고 정의된다. 2006년에는 시간당 임금총액의 중위값이 5,866원이고 이것의 0.67과 1.33배인 3,930원과 7,780원 사이에 있는 계층이 중간임금계층으로 정의된다. 중간임금계층보다 적게 받는 경우 하위임금계층, 많이 받는 경우 상위임금계층으로 정의된다. ‘임금소득자료(1)’와 ‘임금소득자료(2)’에서도 마찬가지로 <표 3>에서와 같이 중간임금계층을 정의하였다.

<표 2> 임금분포 분석 자료 구성

(단위 : 천명, %)

	1993년	2000년	2005년	2006년
전체임금근로자수(T) (경찰조사)	11,944	13,360	15,185	15,551
모 집 단(P) (P/T*100)	10,451 (87.5)	11,328 (84.8)	12,569 (82.8)	12,864 (82.7)
경찰부가조사자료(A)	-	10,618	11,204	11,280
임금소득자료(1)(B)	10,363	11,207	12,363	-
임금소득자료(2)(C)	10,357	11,191	-	-
A/P*100	-	99.1	99.7	99.7
B/P*100	99.2	98.9	98.4	-
C/P*100	99.1	98.8	-	-

주 : 모집단은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농림어업광업 및 공공행정 부문과 파트타임근로자를 제외한 것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사 원자료.

<표 3>에서 볼 때, ‘임금소득자료(1)’이나 ‘임금소득자료(2)’가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에 비해서 시간당 임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임금구조기본조사』의 임금소득자료를 결합할 경우 실제 임금보다 과대평가되어 결합되는 부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금소득자료(1)과 (2)는 추세만을 보는 데 활용하고자 하였고, 주된 분석은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표 3> 임금계층을 구분하는 시간당 임금선

(단위 : 원)

	하위임금계층	중간임금계층	상위임금계층	중위임금
경활부가자료(2000)	3,505 이하	3,508 ~ 6,956	6,959 이상	5,235
경활부가자료(2006)	3,925 이하	3,930 ~ 7,780	7,798 이상	5,866
임금소득자료1(1993)	2,348 이하	2,349 ~ 4,662	4,662 이상	3,505
임금소득자료1(2005)	6,494 이하	6,494 ~ 12,888	12,893 이상	9,693
임금소득자료2(1993)	2,366 이하	2,367 ~ 4,696	4,697 이상	3,533
임금소득자료2(2001)	4,133 이하	4,133 ~ 8,199	8,206 이상	6,169

주 : 일자리(2005)의 경우, 2005년 불변가격으로 환산된 2000~2006년간 평균치를 나타냄. 나머지는 해당 연도의 경상가격 수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부가조사, 노동부, 『임금구조기본조사』 각 연도.

IV. 분석 결과

1. 일자리 및 임금 분포의 전반적 추이

<그림 3>~<그림 5>는 앞에서 검토한 자료와 분석 방법론에 기초하여 1993~2006년까지의 일자리 및 임금 분포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5>의 A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중간일자리 및 중간임금계층의 비중이 1990년대 초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중간일자리 비중은 1993년 50%에서 2006년 41%로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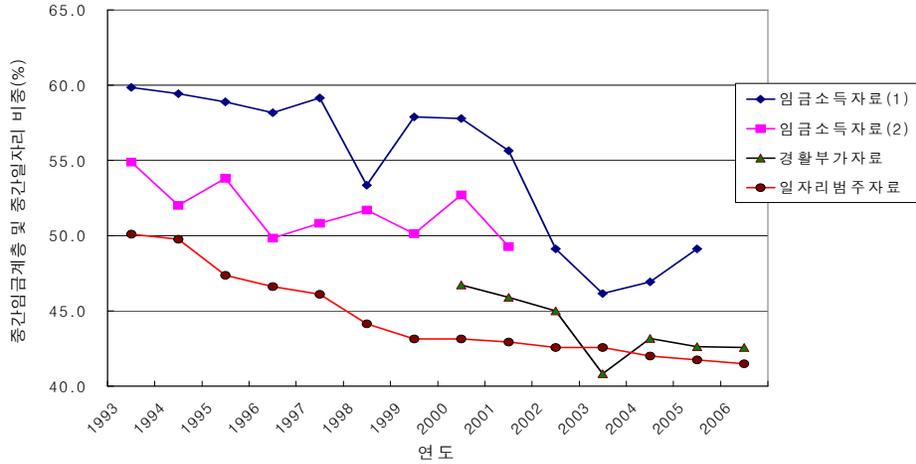
하였다.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임금소득자료(1)’과 ‘임금소득자료(2)’의 경우 하위임금계층의 비중을 과소평가하고 중간임금계층과 상위임금계층의 비중을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중간임금계층의 비중도 50% 초반대에서 40% 초반 대로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하위 및 상위 일자리와 하위 및 상위 임금계층은 빠르게 증가하였다. 다만 하위일자리와 하위 및 상위 임금계층은 2000년을 기준으로 약간 하락하는 추세에 있고 상위일자리 및 상위임금계층이 하위일자리 및 하위임금계층보다도 더 빠르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상위, 하위가 증가하고 중간이 감소하는 양극화가 일자리와 임금 분포에서 추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자리 및 임금의 양극화 현상은 외환위기로 인하여 더욱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분석대상의 초기연도인 1993년 이래 지속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Wright and Dwyer(2003)는 미국의 경우에도 1990년대에 상위일자리 비중이 더 커지는 비대칭적인 형태의 일자리 양극화(asymmetrical polarization of employment opportunities)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하였다. 그럼에도 미국과 비교해 볼 때 하위일자리 비중의 증가 속도는 미국보다 빠른 것으로 보인다. <그림 6>은 일자리 10분위별 고용 창출을 고용 증가량, 고용 비중의 변화, 고용 증가율 등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그림 6>의 A를 보자. 고용 창출이 각 분위별로 고르게 이루어졌다면, <그림 6>의 A에서 나타난 막대들은 모두 동일한 크기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중위 부분의 고용은 크게 감소한 반면, 하위와 상위 일자리는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중하위 일자리의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림 6>의 B와 C를 보면, 하위 1, 2분위와 상위 8, 9, 10분위의 고용 비중이 확대되고 증가속도도 빠른 반면, 나머지 중간분위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비중이 축소되고 증가 속도도 상대적으로 느린 전형적인 양극화된 형태의 고용 창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미국의 1990년대가 숙련편향적 기술변화를 반영하는 J자 형태의 일자리 양극화가 나타났다면, 우리나라의 1990년대는 U자 형에 가까운 일자리 양극화가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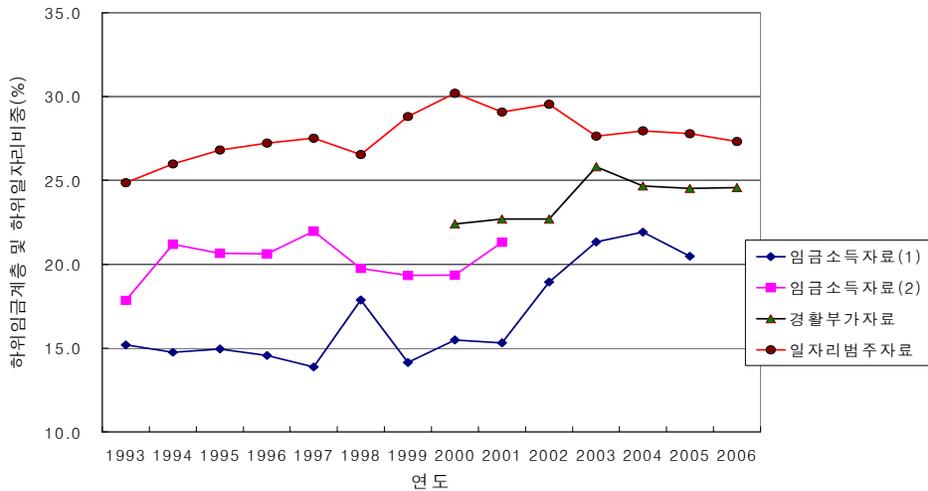
한편 <그림 4>와 <그림 5>에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해 보았다. 남성의 경우 일자리와 임금 분포에서의 양극화 현상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여성의 경우 중간일자리 및 중간임금계층의 감소 현상이 남성보다

<그림 3> 임금 및 일자리 계층별 비중 추이(1993~2006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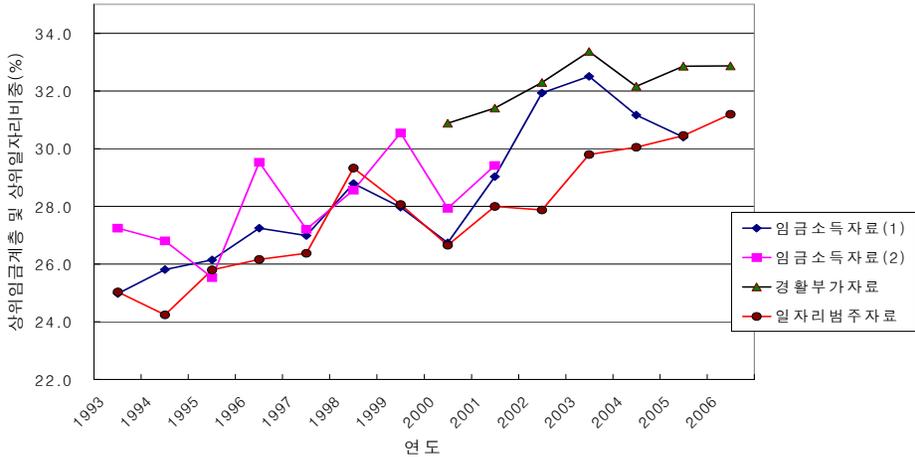
A : 중간임금계층 및 중간일자리 비중 추이



B : 하위임금계층 및 하위일자리 비중 추이



C : 상위임금계층 및 상위일자리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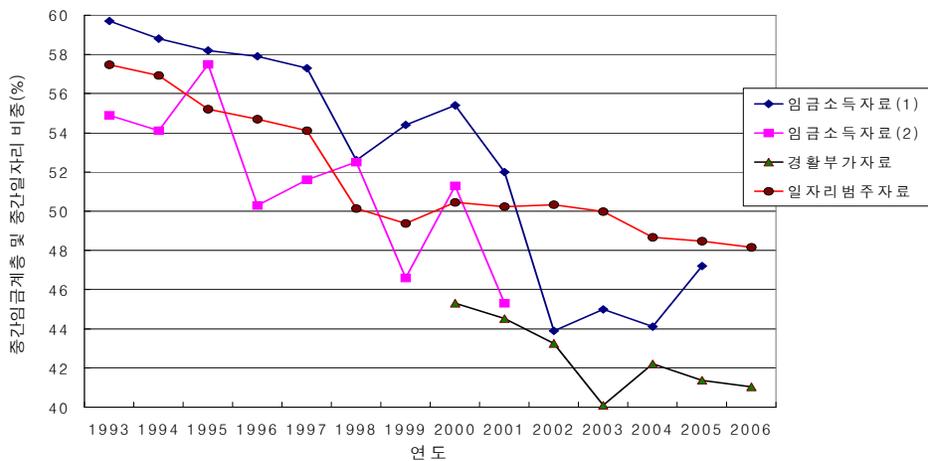


주 : 중간임금계층은 해당 연도의 중위임금의 67~133% 수준의 임금을 받는 계층이며 그 이상과 이하의 계층이 상위임금계층, 하위임금계층으로 정의된다. 중간일자리란 서열화된 일자리(산업-직업셀)에 따른 기준연도(1993년)의 근로자분포가 25~75%인 일자리(산업-직업셀)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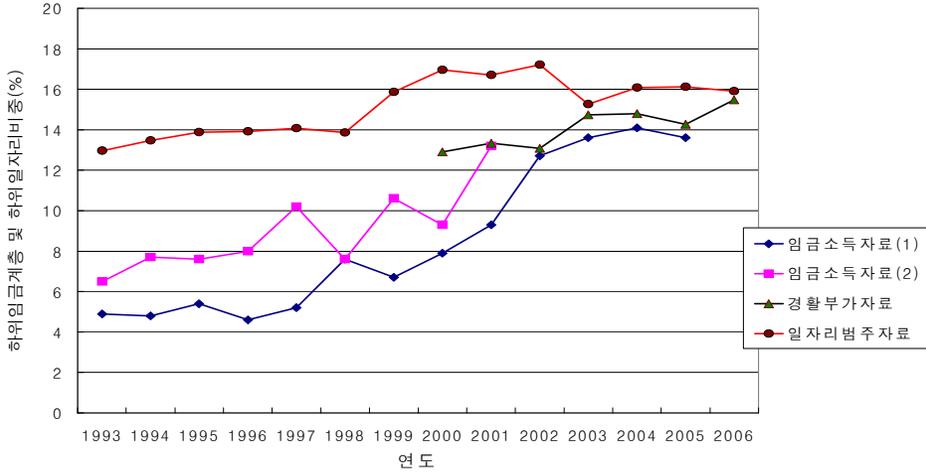
자료 : 일자리범주자료,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임금소득자료(1), 임금소득자료(2) 등은 본문의 내용 참조

<그림 4> 임금 및 일자리 계층별 비중 추이(남성, 1993~2006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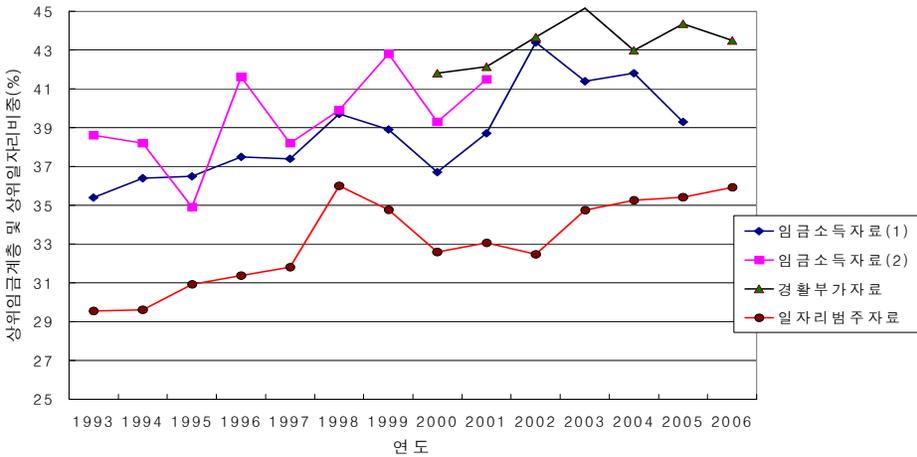
A : 중간임금계층 및 중간일자리 비중 추이



B : 하위임금계층 및 하위일자리 비중 추이



C : 상위임금계층 및 상위일자리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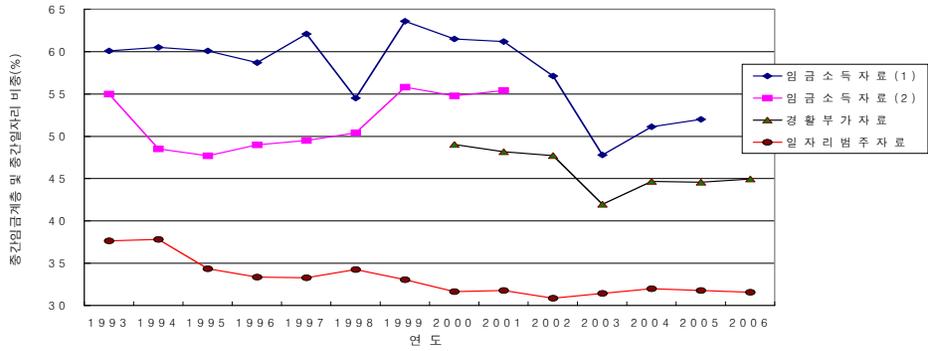


주, 자료 :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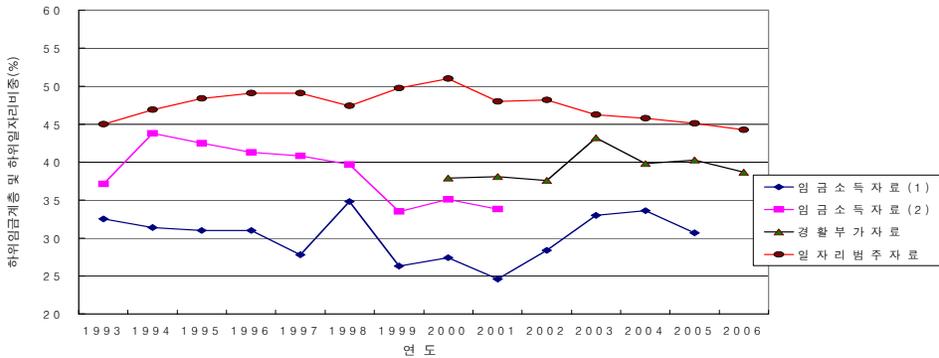
뚜렷하지 않으며, 하위일자리 및 하위임금계층의 비중도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위일자리 및 상위임금계층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다. 즉 노동시장의 양극화 경향은 남성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미국 노동시장의 경우에도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Levy and Murnane 1992).

<그림 5> 임금 및 일자리 계층별 비중 추이(여성, 1993~2006년,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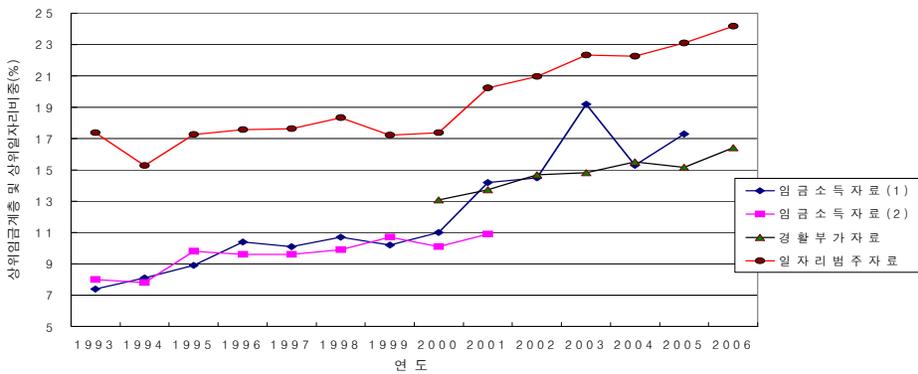
A : 중간임금계층 및 중간일자리 비중 추이



B : 하위임금계층 및 하위일자리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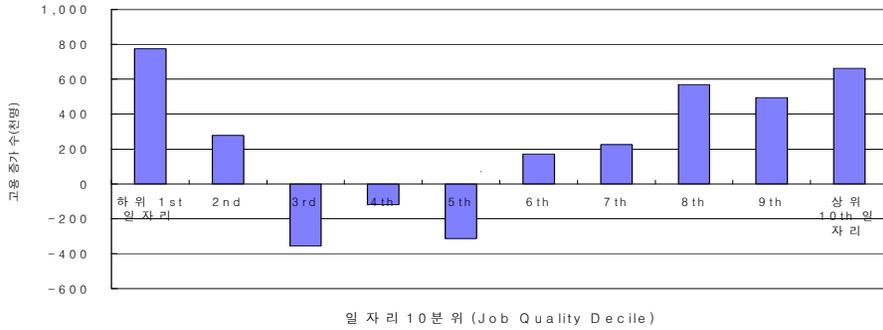
C : 상위임금계층 및 상위일자리 비중 추이



주, 자료 : <그림 3> 참조.

<그림 6> 일자리 10분위별 고용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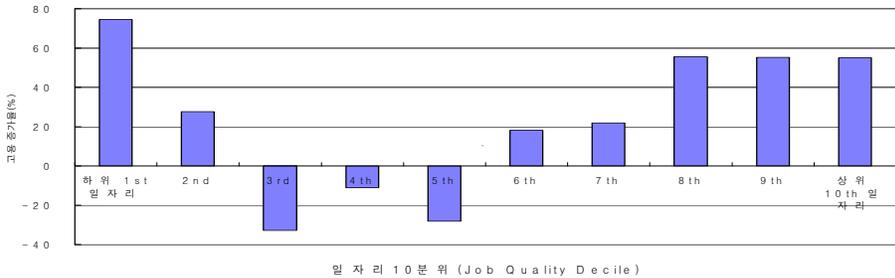
A :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증가량(단위, 천명)



B : 일자리 10분위별 고용비중 변동(단위, %p)



C : 일자리 10분위별 고용증가율(단위, %)



주 : 일자리 10분위는 서열화된 일자리(산업-직업셀)에 따른 기준연도(1993년)의 근로자분포10분위를 차지하는 각각의 일자리(산업-직업셀)군을 나타낸다.

자료 : 『일자리범주자료』, 자세한 내용은 본문 참조

다음으로 일자리와 임금 분포에 따른 고용변동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자. <표 4>의 A는 1993~2006년간 일자리 분포에 따른 고용변동을 계산한 것이며 <표 4>의 B는 2000~2006년간 임금 분포에 따른 고용변동을 계산한 것이다. 임금 분포 구조는 자료의 대표성이 있는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기간이 2000~2006년으로 한정되었다.

먼저 일자리 분포에 따른 고용변동을 보자. 1993~2006년간 전체 고용변동량은 2,385천명이며, 이 중에서 중간일자리는 3.9%에 불과한 92천명에 그쳤다. 중간일자리 고용비중도 앞에서 검토한 대로 50%에서 41%대로 감소한 반면, 하위일자리 2%p, 상위일자리 6%p 비중이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임금 분포에 따른 고용변동을 보자. <표 4>의 B에서 2000~2006년간 전체 고용변동량은 662천명이었는데, 중간임금계층은 절대수가 159천명이나 감소하였다. 중간임금계층의 비중도 47%에서 43%대로 감소한 반면, 하위일자리 2%p, 상위일자리 2%p 비중이 증가하였다.

<표 4> 일자리 및 임금 분포에 따른 고용변동 추이

A : 일자리 분포(1993~2006년)

		고용비중변화(%)			고 용 증가율 (%)	고용변동(천명)		
		1993년	2006년	비중변화 (%p)		1993년	2006년	고 용 변동량
전 체		100	100	0	23	10,419	12,804	2,385
3분위	하위일자리	25	27	2	35	2,589	3,497	908
	중간일자리	50	41	-9	2	5,221	5,313	92
	상위일자리	25	31	6	53	2,608	3,994	1,386
10분위	1분위	10	14	4	75	1,040	1,816	775
	2분위	10	10	0	28	1,002	1,278	277
	3분위	10	6	-5	-33	1,084	728	-357
	4분위	10	7	-3	-11	1,074	955	-119
	5분위	11	6	-4	-28	1,117	803	-314
	6분위	9	9	0	18	945	1,115	171
	7분위	10	10	0	22	1,031	1,257	226
	8분위	10	12	3	55	1,026	1,595	569
	9분위	9	11	2	55	895	1,389	495
	10분위	12	15	3	55	1,205	1,867	663

B : 임금 분포(2000~2006년)

	고용비중변화(%)			고용 증가율 (%)	고용변동(천명)		
	1993년	2006년	비중변화 (%p)		1993년	2006년	고용 변동량
전체	100	100	0	6	10,618	11,280	662
하위임금계층	22	25	2	16	2,380	2,771	392
중간임금계층	47	43	-4	-3	4,960	4,801	-159
상위임금계층	31	33	2	13	3,278	3,707	429

주, 자료 : <그림 3> 참조

이상의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중간일 자리 창출이 매우 부진한 속에 노동시장에서 중간계층이 될 만한 소득을 받는 근로자계층의 절대 수가 감소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산업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이 절에서는 일자리와 임금 분포의 양극화가 제조업에서의 중간일자리 상실과 서비스업에서의 하위일자리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탈산업화론 가설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제조업의 고용비중은 90년대 초반 29%대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6년에는 18%대를 기록하고 있다. 농림어업광업, 공공행정, 그리고 파트타임근로자를 제외한 우리 자료에 기초해서 보면, 제조업 고용비중은 1993년 37%에서 2006년 26%대로 감소했으며, 서비스업 고용비중은 50%에서 65%대로 증가하였다.⁷⁾ 제조업에서 521천명의 고용이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3,084천명의 고용이 증가하였다.⁸⁾ 고용으로 본 산업구조 변화라는 맥

7) 제조업과 서비스업으로 분류하지 않은 전기가수도 및 건설업의 경우도 고용비중이 13%에서 9%로 감소하였다.

8) 199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외국인근로자가 제조업에 약 20만여명이 존재한다는 점

락에서 이러한 빠른 서비스경제로의 전환은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가 일자리 구조의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5>에서 볼 때, 제조업이 서비스업보다 중간일자리와 중간임금계층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3년 제조업의 중간일자리 비중이 53%인 데 반하여 서비스업은 38%에 불과하고, 중간임금계층의 비중도 2000년 제조업이 48%인 데 반하여 서비스업은 45%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2006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6년에 제조업의 중간일자리 비중이 47%인 데 반하여 서비스업은 34%에 불과하고, 중간임금계층의 비중도 제조업이 44%인 데 반하여 서비스업은 41%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고 서비스업의 일자리가 증가하면 중간계층이 줄어들고 고용구조는 양극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표 5> 산업별 일자리 분포와 임금 분포

(단위 : %)

		제 조 업			서 비 스 업		
		하 위	중 간	상 위	하 위	중 간	상 위
일자리 분포	1993년	24	53	23	32	38	30
	2000년	27	46	26	36	35	29
	2006년	20	47	34	34	34	32
임금 분 포	2000년	19	48	32	25	45	30
	2006년	16	44	40	29	41	30

주, 자료 : <그림 3> 참조

또한 <표 6>의 A에서 1993~2006년간의 일자리 분위별 고용변동을 보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모두 중간계층이 줄어드는 양극화 추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경우 하위일자리가 많아지는 형태라면, 제조업은 중하위 일자리가 사라지고 상위일자리만 늘어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특히 임금분포를 기준으

를 고려하면, 이 수치는 약간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 부문에도 20만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에서의 20만명 정도의 외국인 고용 규모가 우리나라의 서비스 경제로의 빠른 전환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로 해서 보면 이러한 특징은 더욱 뚜렷하다. 제조업이 중하위일자리(및 중하위임금계층)를 줄이면서 상위일자리(및 상위임금계층) 중심으로 재편되는 반면, 서비스업은 하위일자리(및 하위임금계층)가 더욱 많아지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 J자 형태의 고용변동을 나타낸 반면, 서비스업의 경우는 U자 형태의 고용변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제조업의 경우 숙련편향적 기술진보가 진전되면서 상대적으로 고숙련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중위숙련 이하의 일자리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제조업 일자리는 저학력층에게 고임금일 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제 제조업은 고학력을 위한 일자리만 부분적으로 창출하고, 저학력자를 위한 반숙련일 자리는 빠르게 소멸시키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서비스 부문의 경우 일자리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비스업은 주로 하위와 상위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고용구조 자체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바뀔 경우 일자리 양극화가 진전되는 것은 사실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서비스업의 경우 하위일자리와 하위임금계

<표 6> 산업별 일자리분포 및 임금분포에 따른 고용변동 추이

A : 일자리 분포에 따른 고용변동 추이

		고용비중변화(%)			고용증가율(%)	고용변동(천명)		
		1993년	2006년	비중변화(%p)		1993년	2006년	고용변동량
제조업	하위일자리	9	5	-4	-29	921	655	-266
	중간일자리	19	12	-7	-24	2,021	1,538	-484
	상위일자리	8	9	0	26	883	1,111	229
전기가스·건설	하위일자리	0	0	0	-58	20	8	-12
	중간일자리	12	7	-4	-20	1,201	958	-244
	상위일자리	2	2	0	46	168	246	78
서비스업	하위일자리	16	22	6	72	1,648	2,834	1,186
	중간일자리	19	22	3	41	1,999	2,817	819
	상위일자리	15	21	6	69	1,557	2,637	1,079

B : 임금 분포에 따른 고용변동 추이

		고용비중변화(%)			고용 증가율 (%)	고용변동(천명)		
		2000년	2006년	비중 변화 (%p)		2000년	2006년	고용 변동량
제 조 업	하위임금계층	6	4	-2	-22	625	489	-136
	중간임금계층	15	11	-3	-17	1,558	1,297	-261
	상위임금계층	10	10	1	14	1,032	1,179	147
전가가스· 건설	하위임금계층	2	2	0	11	160	176	17
	중간임금계층	5	5	0	2	579	590	12
	상위임금계층	4	4	0	4	383	397	14
서비스업	하위임금계층	15	19	4	32	1,595	2,106	511
	중간임금계층	27	26	-1	3	2,824	2,914	90
	상위임금계층	18	19	1	14	1,864	2,131	267

주 : 고용비중은 전산업고용을 100으로 했을 때, 개별산업고용의 비중을 나타냄.

주, 자료 : <그림 3> 참조

층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제조업에서 중간일자리가 사라지고 서비스업에서 맥도날드잡(Mac Jobs)과 같은 단순저임금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보몰의 병폐(Baumol's Disease)로 알려져 있듯이, 서비스 부문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기 때문에, 서비스업은 제조업보다 임금 수준이 낮고 서비스업으로의 이행은 좋은 일자리로부터 나쁜 일자리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00년부터는 제조업의 임금이 서비스업을 능가하여 갈수록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임금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표 7>에서 볼 때 평균임금기준으로 2000년 서비스업 임금은 제조업임금의 99% 수준에서 2006년 88%로, 중간임금기준으로는 91%에서 82%로 하락하였다. 이는 사업서비스나 사회서비스 등 상대적으로 양호한 일자리가 많은 부문이나 유통이나 개인서비스업 등 저임금일자리가 많은 부문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7> 제조업임금 대비 여타 부문의 임금비율(시간당 임금기준, 2000~2006년)

	연 도	전 체	제조업	전기 가스	건설업	서비스업	사 업	사 회	유 통	개 인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
평균 임금 기준	2000	100	100	158	102	99	118	119	96	63
	2001	98	100	150	96	97	114	117	93	64
	2002	96	100	157	102	94	113	111	91	60
	2003	96	100	179	94	94	114	111	90	58
	2004	100	100	172	101	99	116	118	92	62
	2005	93	100	157	90	90	107	108	85	57
	2006	91	100	170	89	88	103	104	85	56
중간 임금 기준	2000	95	100	170	100	91	111	111	93	64
	2001	94	100	155	99	90	110	102	90	63
	2002	96	100	187	110	90	116	108	92	62
	2003	92	100	203	99	86	110	101	88	56
	2004	95	100	191	102	92	113	111	92	61
	2005	90	100	193	94	84	103	101	84	56
	2006	89	100	192	96	82	98	100	85	56

주 : 농림어업광업 및 공공행정 부문 그리고 파트타임 근로자 제외.

전기가스수도업 및 건설업은 서비스업에 포함하지 않았음.

자료 : 『경제활동인구 8월 부가조사』 각 연도.

한편 <표 8>과 <표 9>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부문별로 좀더 자세히 본 것이다. 제조업은 크게 일반적인 분류에 따라 경공업과 중화학공업으로 구분하였다. 서비스업의 경우 OECD(2000)에 따라 사업서비스업, 유통서비스업, 개인서비스업, 사회서비스업 등으로 재분류하였다. 사업서비스업은 사업전문서비스, 금융서비스, 보험, 부동산임대 등을 포괄하고, 유통서비스업은 소매, 도매, 운수, 통신 등을, 개인서비스업은 음식숙박, 문화오락, 기타개인서비스 등을,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는 공공행정, 보건의료, 교육, 복지 및 기타서비스 등을 포괄한다.

제조업의 경우 경공업에서 중하위 일자리가 크게 감소한 반면 중화학공업에서는 상위일자리가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사업서비스에서 하위일자리 및 하위임금계층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며,⁹⁾ 유통 및 개인 서비스업에서 중간일자리 및 중

간임금계층이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양극화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에서도 부문별로 일자리 분위별 또는 임금 분위별 고용 창출 방식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부문 내 고용변동(within shifts) 보다는 부문 간 고용변동(between shifts)이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표 8> 제조업 부문별 고용변동 추이

A : 일자리 분포에 따른 고용변동 추이

		고용비중변화(%)			고용 증가율 (%)	고용변동(천명)		
		1993년	2006년	비중 변화 (%p)		1993년	2006년	고용 변동량
경 공 업	하위일자리	21	13	-8	-47	793	421	-371
	중간일자리	22	13	-8	-47	829	439	-390
	상위일자리	5	5	0	-6	188	176	-12
중화학공업	하위일자리	3	7	4	82	129	234	105
	중간일자리	31	33	2	-8	1,192	1,099	-94
	상위일자리	18	28	10	35	695	936	241

B : 임금 분포에 따른 고용변동 추이

		고용비중변화(%)			고용 증가율 (%)	고용변동(천명)		
		2000년	2006년	비중 변화 (%p)		2000년	2006년	고용 변동량
경 공 업	하위임금계층	11	8	-2	-29	345	245	-100
	중간임금계층	20	15	-5	-32	657	450	-207
	상위임금계층	9	8	-1	-15	277	236	-41
중화학공업	하위임금계층	9	8	0	-13	280	244	-36
	중간임금계층	28	29	1	-6	901	847	-54
	상위임금계층	23	32	8	25	754	943	189

주 : 고용비중은 제조업 전체 고용을 100으로 했을 때, 개별 업종의 고용비중을 나타냄.

주, 자료 : <그림 3> 참조

9) 사업서비스업에서의 하위일자리 증가는 제조업의 외주화청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9> 서비스업 부문별 고용변동 추이

A : 일자리 분포에 따른 고용변동 추이

		고용비중변화(%)			고용 증가율 (%)	고용변동(천명)		
		1993년	2006년	비중변화 (%p)		1993년	2006년	고용 변동량
사 업 서비스	하위일자리	3	7	3	226	168	549	381
	중간일자리	7	9	2	108	366	761	395
	상위일자리	11	12	1	76	568	1,000	432
사 회 서비스	하위일자리	1	2	1	130	76	175	99
	중간일자리	8	8	-1	46	439	642	203
	상위일자리	11	12	2	82	555	1,012	457
유 통 서비스	하위일자리	12	11	-1	44	614	883	270
	중간일자리	21	15	-5	17	1,086	1,275	189
	상위일자리	8	7	-1	41	398	561	164
개 인 서비스	하위일자리	15	15	0	55	790	1,226	436
	중간일자리	2	2	0	29	108	139	32
	상위일자리	1	1	0	73	37	64	27

B : 임금 분포에 따른 고용변동 추이

		고용비중변화(%)			고용 증가율 (%)	고용변동(천명)		
		2000년	2006년	비중변화 (%p)		2000년	2006년	고용 변동량
사 업 서비스	하위임금계층	5	7	2	62	306	497	191
	중간임금계층	10	9	0	9	617	671	54
	상위임금계층	11	11	0	18	664	786	121
사 회 서비스	하위임금계층	2	3	1	51	141	213	72
	중간임금계층	7	8	1	30	460	596	136
	상위임금계층	7	7	1	25	428	535	108
유 통 서비스	하위임금계층	8	9	0	18	517	612	95
	중간임금계층	20	16	-3	-5	1,226	1,164	-62
	상위임금계층	11	10	-1	2	676	692	16
개 인 서비스	하위임금계층	10	11	1	24	631	784	153
	중간임금계층	8	7	-2	-7	520	483	-38
	상위임금계층	2	2	0	23	96	118	22

주 : 고용비중은 서비스업 전체 고용을 100으로 했을 때, 개별 업종의 고용비중을 나타냄.

주, 자료 : <그림 3> 참조

우리나라의 경우 제조업의 일자리가 줄고 서비스업으로의 고용구조가 바뀌면서 일자리 및 임금소득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인력과 제조업 내부기능의 외주하청 문제이다. 『경제활동인구조사』가 외국인 인력을 조사하지 않고 있으며 외주하청의 실태에 관한 대표성 있는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의 분석적 결론이 강건(robust)하기 위해서는 첫째, 외국인인력이 제조업의 저임금일자리를 대체하였다는 점, 둘째, 과거 제조업에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기능이 외주하청화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더 엄밀한 분석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업으로도 외국인인력이 거의 같은 규모로 들어와 있고, 제조업으로부터의 서비스기능이 외주하청화하는 경향 자체가 서비스경제화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고용구조의 변화가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3. 인력구조의 변화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앞에서 검토한 대로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설명하는 유력한 가설 중의 하나는 인력 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것이다.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나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함으로써 하위 계층이 확대되어 노동시장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확대된다는 가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경제활동 참가가 외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지난 10여 년간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여성고용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여성의 경활참가율은 1993년 47.1%에서 2006년에 50.2%, 고용률은 46.0%에서 48.9%로 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여성 비중도 1993년 37.8%에서 2006년 41.5%로 증가하였다.

여성의 일자로나 임금 분포 자체가 하위 부문이 상대적으로 큰 양극화된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 하에서의 여성고용의 증가는 일자리 및 임금의 양극화를 심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표 10>에서 보듯이 1993년 중간일자리의 비중은 남성이 57%인 데 반하여 여성은 38% 수준이다. 2006년에도 마

찬가지로 남성이 48%, 여성이 32%이다. 특히 하위 일자리의 비중은 여성의 경우 월등하게 높다. 임금 분포에 있어서도 여성의 경우 중하위 임금계층의 비중이 매우 높다.

<표 10> 성별 일자리 분포와 임금 분포에 따른 고용비중 추이

(단위 : %)

		남 성			여 성		
		하 위	중 간	상 위	하 위	중 간	상 위
일 자 리	1993년	13	57	30	45	38	17
	2000년	17	50	33	51	32	17
	2006년	16	48	36	44	32	24
임금분포	2000년	13	45	42	38	49	13
	2006년	15	41	43	39	45	15

주, 자료 : <그림 3> 참조

그러나 여성의 경우 하위계층의 비중이 높긴 하지만, 여성들의 노동시장 진입이 하위일자리 및 하위임금계층을 크게 확대시킨다는 증거는 발견하기 어렵다. 우선 앞에서 검토한 대로 일자리 및 임금 양극화는 여성보다는 남성 중심으로 나타났다. <표 11>에서 보듯이, 여성의 경우 하위일자리나 하위임금계층보다는 상위일자리 및 상위임금계층의 고용증가 규모와 증가율 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하위계층의 비중이 전반적으로 높기 때문에 하위일자리나 하위임금계층의 증가 규모가 크기는 하지만, 하위계층의 비중 변화나 증가율 면에서는 남성보다 높은 편은 아니다.¹⁰⁾ 또한 중간일자리나 중간임금계층에서도 여성의 경우 남성의 경우처럼 절대적으로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가 여성의 빈곤화 그리고 전체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영옥·민현주·김복순(2006)

10)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0여년간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확대되는 추세가 주요 선진국의 과거 경험에 비해서 또는 여타 계층의 변화에 비해서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규모에서도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다.

도 거의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1993~2004년간의 여성일자리의 양극화 가설을 검증하였는데, 여성의 경우 대칭적인 양극화 경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만, 여성의 경우 하위일자리 증가 규모 자체가 크고 여기에 저학력, 고령, 비정규직 여성들이 포진해 있으면서 빈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표 11> 성별 일자리 분포와 임금 분포에 따른 고용변동

		고용비중변화(%)			고용 증가율 (%)	고용변동(천명)		
		1993년	2006년	비중 변화 (%p)		1993년	2006년	고용 변동량
남 성	하위일자리	8	10	1	43	850	1,217	367
	중간일자리	36	29	-7	-2	3,766	3,684	-82
	상위일자리	19	21	3	42	1,937	2,748	811
여 성	하위일자리	17	18	1	31	1,740	2,280	540
	중간일자리	14	13	-1	12	1,455	1,628	173
	상위일자리	6	10	3	86	671	1,247	575

		고용비중변화(%)			고용 증가율 (%)	고용변동(천명)		
		2000년	2006년	비중 변화 (%p)		2000년	2006년	고용 변동량
남 성	하위임금계층	8	9	1	25	848	1,061	213
	중간임금계층	28	25	-3	-6	2,981	2,814	-167
	상위임금계층	26	26	1	8	2,751	2,982	231
여 성	하위임금계층	14	15	1	12	1,531	1,710	179
	중간임금계층	19	18	-1	0	1,980	1,987	8
	상위임금계층	5	6	1	38	528	726	198

주 : 고용비중은 남녀 전체고용을 100으로 할 때, 일자리 및 임금계층 비중을 나타냄.
 주, 자료 : <그림 3> 참조

따라서 전체적인 추세로 볼 경우,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더 많이 진입함에 따라 고용 및 임금 구조가 양극화되었다는 가설은 우리나라의 경우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중위일자리에서 남성고용이 거의 늘지 않

은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여성고용의 추이를 보면, 1960년대에는 하위일자리에서의 여성고용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1990년대에는 상위일자리에서의 여성고용이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Wright and Dwyer 2003, Ruth and Dwyer 2002), 여성들이 저임금일자리로부터 벗어나 고임금일자리로 전환하는 현상을 경험하였다(Gittleman and Howell 1995). 여성의 노동시장 진입 확대 자체가 고용의 양극화를 초래했다는 가설은 현실적으로 잘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주로 하위일자리에 저임금으로 청년층이 다수 진입해서 초래된 것이라는 가설을 검토해 보자.¹¹⁾

지난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력 구조를 보면, 외환위기인 1997년을 전후하여 청년층의 비중이 급속히 감소하였다. 15세 이상 인구 중 청년층의 비중은 1993년 36.4%에서 1997년 33.6%까지 감소하였다가 2006년 25.4%까지 감소하였다. 전체 풀타임 임금근로자에서 청년층의 비중도 1993년 38.1%에서 1997년 35.3%로 약간 감소하였다가 2006년에 25.4%까지 감소하였다. 즉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청년층이 노동시장의 하위계층에 퇴적할 만큼 큰 규모로 진입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청년층의 고용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쟁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과거에 청년층에게 제공되던 중간일자리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표 12>에서 보면, 1993년부터 2006년까지 중간일자리 감소는 대부분 청년층에게 집중되었다. 30대 이상 계층의 경우 중간일자리가 771천개 증가한 반면, 청년층의 중간일자리 감소는 677천개가 감소하였다. 청년인력의 일부가 상위일자리에만 진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청년층이 하위일자리로 진입해 들어가서 일자리가 양극화된거나 청년층이 하위일자리에 퇴적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청년층에게 중위 및 중상위 일자리 기회가 사라지면서 양극

11) 청년층의 경우 하위일자리로 낮은 임금으로 진입하는 것이 주로 근로경험의 부족에 기인한 것이며 근로경험의 축적에 따라 이전 세대를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라면, 즉, 하위일자리가 청년층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 위한 가교(bridge)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면, 정책적으로 양극화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위일자리로 청년층이 집중되어 있고 이것이 저임금을 제공하는 노동시장으로 한 세대의 청년층을 가두어 놓는 것이라면 이는 정책적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화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년층의 경우 상위일자리가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위임금계층의 절대적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이는 청년층의 경우 상위일자에 진입해도 좋은 조건으로 진입하는 것이 아님을 시사한

<표 12> 연령대별 일자리 및 임금 분포에 따른 고용변동

		고용비중변화(%)			고용 증가율 (%)	고용변동(천명)		
		1993년	2006년	비중 변화 (%p)		1993년	2006년	고용 변동량
15~29세	하위일자리	9	6	-3	-19	929	757	-172
	중간일자리	20	11	-9	-32	2,135	1,458	-677
	상위일자리	10	9	-1	13	1,019	1,147	128
30~49세	하위일자리	11	13	2	50	1,122	1,683	560
	중간일자리	24	24	0	22	2,519	3,071	552
	상위일자리	13	19	6	82	1,337	2,437	1,100
50세이상	하위일자리	5	8	3	97	538	1,058	519
	중간일자리	5	6	1	38	567	784	217
	상위일자리	2	3	1	63	251	410	159

		고용비중변화(%)			고용 증가율 (%)	고용변동(천명)		
		2000년	2006년	비중 변화 (%p)		2000년	2006년	고용 변동량
15~29세	하위임금계층	8	7	-2	-17	895	746	-149
	중간임금계층	20	14	-5	-23	2,106	1,625	-481
	상위임금계층	6	6	-1	-7	676	627	-50
30~49세	하위임금계층	9	10	1	22	940	1,149	209
	중간임금계층	22	22	0	8	2,311	2,488	177
	상위임금계층	21	23	2	14	2,282	2,610	328
50세이상	하위임금계층	5	8	3	61	545	877	332
	중간임금계층	5	6	1	27	544	689	145
	상위임금계층	3	4	1	47	320	471	151

주 : 고용비중은 전체 연령대의 고용을 100으로 할 때, 일자리 및 임금계층의 비중을 나타냄.

주, 자료 : <그림 3> 참조

다. 상위일자리는 주로 30~49세 계층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하위일자리의 증가는 주로 고령층들의 퇴직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중·장년층의 경우에도 하위일자리로의 진입이 늘어나면서 고용 창출 구조의 양극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의 중간일자리 감소, 중·장년층의 경우 상위일자리 증가, 고령층의 하위일자리 증가 등이 연령대에 따른 일자리 분포의 추이이며, 임금분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 현상이다. 이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중간일자리 영역에서 청년층의 채용이 크게 위축되었다는 점,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인 기존의 중·장년층이 상위일 자리를 독점하고 있다는 점, 정규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있는 고령층이 하위일자리로 퇴직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반영한다. 이는 노동시장 양극화가, 인력의 연령구조가 바뀌면서 저절로 일어난 현상이라기보다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기업의 채용, 이직 및 인력 관리 방식이 변하면서 초래된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표 13>과 <표 14>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성·연령별 일자리 구조의 변화를 좀더 자세히 살펴본 것이다. 우선 제조업의 중간일자리 감소를 좀더 자세하게 보자. 30~49세까지의 중년층의 제조업 중간일자리 수는 711천명에서 705천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제조업 중간일자리 수 감소는 604천명에서 275천명으로 줄어든 청년남성층 및 246천명에서 130천명으로 감소한 청년여성층의 감소에 대부분 기인한다. 오히려 제조업 중간일 자리는 중·장년층에서 변화가 없고 고령층에서는 증가하였다. 제조업 중간일자리 감소는 중·장년층의 방출보다는 청년층의 신규채용이 극도로 억제되고 이것이 청년층의 노동력 감소와 맞물려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서비스업에서의 하위일자리 증가는 50대 이상 고령층이 주도하였다. 이는 제조업에서 남성 50대 이상 고령층에서 상위일자리가 두 배 이상 증가한 점과 대비된다. 50대 이상의 고령인력의 확대가 하위일 자리를 단순히 증가시켰다기보다는, 제조업의 중상위일 자리의 제한적 증가와 서비스업에서의 중상위일 자리의 부족이 중간일자리 감소 - 하위일자리 증가를 촉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비스업의 하위일자리 증가에 절대적 규모에서 가장 크게 기여한 계층은 여성중·장년층이다. 여성들이 육아를 마친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경우 하위일 자리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30~49세의 여성중·장

년층이 서비스 부문의 중간일자리 및 상위일자리에서는 더 높은 증가율을 보여 주고 있다. 반드시 여성중·장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하위일자리로의 퇴적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청년층 중에서도 남성의 경우 제조업 부문의 중하위 일자리가 크게 줄어 든 반면 서비스 부문의 하위일자리로의 진입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이를 학력별로 더 세분화해서 볼 경우 대부분 저학력남성들이

<표 13> 제조업에서의 일자리분위별 성별, 연령별 인력구성 변화

구분	성별	연령별	고용비중변화(%)			고용 증가율 (%)	고용변동(천명)		
			1993년	2006년	비중 변화 (%)		1993년	2006년	고용 변동량
하위 일자리	남성	15~29	10	7	-3	-52	92	44	-48
		30~49	13	15	2	-16	118	99	-19
		50~	6	8	2	-5	55	52	-3
	여성	15~29	21	4	-17	-87	196	25	-171
		30~49	36	47	11	-8	333	306	-27
		50~	14	20	6	1	127	128	1
중간 일자리	남성	15~29	30	18	-12	-54	604	275	-329
		30~49	35	46	11	-1	711	705	-6
		50~	5	10	5	48	107	158	51
	여성	15~29	12	8	-4	-47	246	130	-115
		30~49	15	14	0	-25	297	222	-76
		50~	3	3	0	-16	57	48	-9
상위 일자리	남성	15~29	27	16	-11	-24	237	179	-57
		30~49	51	58	8	45	446	645	199
		50~	5	9	4	126	45	101	56
	여성	15~29	15	10	-5	-13	133	116	-17
		30~49	2	6	4	283	17	66	49
		50~	1	0	0	-20	5	4	-1

주 : 고용비중은 일자리 분위별 고용을 100으로 했을 때, 성·연령대별 고용비중을 나타냄.
 자료 : <그림 3> 참조

이러한 현상을 주도하고 있다. 저학력 남성청년층의 경우 제조업에서 중간일자리가 소멸되면서 서비스업의 하위일자리로 이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의 경우 노동력이 절대적으로 감소하기는 하였지만, 서비스업 부문의 하위일자리는 증가한 것이다. 반면 여성청년층의 경우 제조업 상위일자리에서는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상위일자리에서는 크게 증가하였다.

위의 결과를 전반적으로 종합해 보면, 성별, 연령대별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부문에서 서로 다른 고용성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이나 연령을

<표 14> 서비스업에서의 일자리분위별 성별, 연령별 인력구성 변화

구 분	성 별	연령별	고용비중변화(%)			고 용 증가율 (%)	고용변동(천명)		
			1993년	2006년	비중 변화 (%p)		1993년	2006년	고 용 변동량
하 위 일자리	남 성	15~29	15	13	-2	44	249	360	111
		30~49	11	11	0	70	186	316	130
		50~	8	12	4	152	135	341	206
	여 성	15~29	24	12	-12	-16	391	327	-64
		30~49	29	34	5	100	480	958	478
		50~	13	19	6	157	207	532	325
중 간 일자리	남 성	15~29	22	13	-8	-12	434	380	-54
		30~49	34	36	2	49	689	1,023	334
		50~	7	10	3	99	145	289	144
	여 성	15~29	27	19	-8	-2	536	527	-9
		30~49	8	19	11	229	162	533	371
		50~	2	2	1	97	33	64	32
상 위 일자리	남 성	15~29	18	10	-8	-4	274	265	-10
		30~49	39	42	2	80	611	1,098	487
		50~	11	9	-2	39	169	236	67
	여 성	15~29	21	21	0	67	325	543	218
		30~49	10	18	7	183	163	462	299
		50~	1	1	0	127	14	32	18

주 : 고용비중은 일자리 분위별 고용을 100으로 했을 때, 성·연령대별 고용비중을 나타냄.

자료 : <그림 3> 참조

기준으로 하는 인력구조의 변화가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노동시장의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산업구조의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인력구조 변화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현상인 고학력화에 대해 검토해 보자. 전체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대졸자의 비중은 1993년 9.4%에

<표 15> 일자리 및 임금 분포별, 학력별 고용변동 추이

구 분	학력별	고용비중(일자리별)			고 용 증가율 (%)	고용량		
		1993년	2006년	변동률		1993년	2006년	변동량
하 위 일자리	고 졸	96	89	-8	25	2,477	3,090	613
	전문대졸	2	7	5	386	47	231	183
	대 졸	2	5	3	272	45	169	123
중 간 일자리	고 졸	85	65	-20	-18	3,427	2,821	-606
	전문대졸	6	16	10	190	238	690	452
	대 졸	9	19	11	137	356	844	488
상 위 일자리	고 졸	50	25	-26	-25	1,229	920	-309
	전문대졸	9	18	10	219	216	689	473
	대 졸	41	57	16	115	995	2,139	1,144

구 분	학력별	고용비중(일자리별)			고 용 증가율 (%)	고용량		
		1993년	2006년	변동률		1993년	2006년	변동량
하 위 임금계층	고 졸	90	86	-4	11	2,136	2,378	242
	전문대졸	6	8	1	40	152	214	61
	대 졸	4	6	3	97	92	180	88
중 간 임금계층	고 졸	77	68	-9	-15	3,823	3,250	-572
	전문대졸	12	17	6	46	571	832	261
	대 졸	11	15	4	27	567	719	152
상 위 임금계층	고 졸	49	40	-8	-6	1,594	1,493	-101
	전문대졸	11	14	3	43	362	516	154
	대 졸	40	46	5	28	1,322	1,698	377

주 : 고용비중은 일자리 분위별, 임금계층 분위별 고용을 100으로 했을 때, 학력별 고용비중을 나타냄.

주, 자료 : <그림 3> 참조

서 2006년 18.5%로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취업자에서 대졸자 비중도 1993년 14.9%에서 27.5%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고학력화가 일자리 수준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바로 연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표 15>에서 보면, 대졸자와 전문대졸자를 중심으로 상위일자리와 상위임금계층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증가율을 보면, 대졸자와 전문대졸자들이 상위일자리보다 중간일자리에서, 중간일자리보다 하위일자리에서 더 높은 고용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임금계층별로 보더라도 동일하다. 고학력화가 진전되면서 중하위 일자리에서 고학력자에 의한 저학력자의 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두 가지 가설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숙련편향적 기술진보(skill-biased technological progress) 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과잉교육(overeducation) 가설일 것이다. 숙련편향적 기술진보로 인해서 특정 직업 내에서 요구되는 교육수준이 높아져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고, 전반적인 학력수준의 향상과 고학력자의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다. 아직 어떤 가설이 더 유력한지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지만, 직업내용 자체가 10여년 사이에 빠르게 바뀌지는 않는다는 점과 최근의 고학력자 공급 증가 현상을 감안하면 과잉교육 가설이 좀더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대졸청년의 임금을 전체 임금수준 대비해서 검토해 보면, 2000년에 대졸청년의 임금수준은 전체 임금수준의 110%이었는데, 2006년에는 100%로 줄어들었다. 이는 대졸청년들이 중상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중하위일자리로 밀려나고 중하위임금계층으로 더 많이 빠져나간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고학력화가 전반적인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완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성, 연령대별로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서로 다른 고용성과를 보여준다는 점, 그리고 고학력화가 일률적으로 일자리 및 임금계층의 상향화를 초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은 인력구조의 변화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설명하는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4. 일자리 양극화와 임금 양극화의 관계

임금소득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물론 일자리의 질이 임금소득 분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평균적으로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일자리는 그 일자리를 가진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금소득 분포에는 일자리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작용할 수 있다. 동일한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기술변화로 일자리의 성격이 바뀐다거나 그 일자리를 구성하고 있는 인력의 구성이 여성이나 청년, 고령층 등 저임금인력으로 바뀐다거나 여타 제도적인 요인에 의해서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전반적으로 하락하거나 상승할 경우 일자리분포와 임금분포 사이에는 직렬적인 연관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다.

<표 16>은 일자리계층별로 임금계층의 분포를 2000년과 2006년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중간일자리가 중간 정도의 임금소득 수준을 보장하는 비중이 2000년에 비해 2006년의 경우 낮아졌다는 점이다. 중간일자리에서 중간임금소득을 보장하는 비율은 2000년 56%에서 2006년 52%로 낮아졌고 상대적으로 상위임금소득을 보장하거나 하위임금소득을 보장하는 비중은 높아졌다. 즉, 중간일자리 내에서 임금수준별로 양극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하위일자리인 경우 중간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비율이 2000년에는 50% 정도는 되었는데, 2006년에는 43% 수준으로 크게 줄어들었다. 반면 상위일자리인 경우 상위임금소득을 보장하는 비율이 더 늘었다. 즉, 이 <표>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중간일자리를 가지더라도 중간임금소득이 보장되지 못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한번 일자리별로 계층화되면 소득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하위일자리를 얻을 경우 하위임금계층으로 빠질 확률이 더욱 커지고 상위일자리를 얻을 경우 상위임금계층으로 갈 확률이 좀더 커졌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며,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여성이나 제조업의 경우 중간일자리가 중간소득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비중이 더 커졌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중산층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자리의 양극화를 줄이고 중간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 내에서도 중간임금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16> 일자리별, 계층별 임금계층 분포 추이

(단위 : %)

구 분	일자리별	2000년				2005년			
		하 위 임금계층	중 간 임금계층	상 위 임금계층	합 계	하 위 임금계층	중 간 임금계층	상 위 임금계층	합 계
전 체	하위일자리	50	45	5	100	57	39	4	100
	중간일자리	14	56	30	100	15	52	33	100
	상위일자리	4	28	68	100	3	28	69	100
남 성	하위일자리	38	52	9	100	48	45	7	100
	중간일자리	10	54	35	100	12	50	38	100
	상위일자리	2	22	76	100	2	21	78	100
여 성	하위일자리	56	41	3	100	62	35	3	100
	중간일자리	25	61	15	100	22	57	21	100
	상위일자리	9	47	44	100	6	47	47	100
제조업	하위일자리	45	51	5	100	49	46	4	100
	중간일자리	13	56	31	100	11	51	38	100
	상위일자리	4	28	68	100	2	29	69	100
서비스	하위일자리	52	43	5	100	59	37	4	100
	중간일자리	14	56	30	100	16	52	32	100
	상위일자리	4	30	67	100	3	29	69	100

주 : 위의 수치들은 각 일자리 내에서 임금계층 분위별 비중을 나타냄.

주, 자료 : <그림 3> 참조

V. 맺음말

우리는 앞에서 불평등 문제를 노동시장에서의 중간계층 축소, 즉 일자리와 임금 분포의 양극화라는 맥락에서 접근하였다. 우리 사회가 1990년대 이후 일자리와 임금 분포에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진행되고 있고, 기존의 일자리 구조 안에서도 임금 분포가 양극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중간계층 축소 경향은 일반적인 소득불평등 문제가 제기하는 정책적 함의보다 풍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고용변동은 소득변동이 다 파악하지 못하는 사회적 불평등과 빈곤에 대해서도 정책적 함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일자리와 중간임금계층의 축소는 ‘저임금일자리 - 근로빈곤층’(trash-jobs and working poor)의 문제를 제기한다. 즉 빈곤문제가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취약 계층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근로빈곤의 문제라는 점을 제기한다. 실업이나 노동 시장으로부터의 탈락·배제가 빈곤 현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빈곤층의 상당 부분이 저위일자리에 퇴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도 있다. 또한 정책적으로도 빈곤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빈곤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정책에 그치지 않고, 하위일자리의 생산성과 고용의 질 및 임금 수준을 동시에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와 임금의 양극화는 개인의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의 기회를 제약하고, 사회적 연대를 해치며 다른 형태의 차별과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 중간일자리의 축소는 동태적으로 하위의 일자리를 가진 자들이 더 높은 일자리로 상향이동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일자리의 상향이동은 대부분 현재 일자리보다 약간 수준이 더 높은 일자리로의 이동이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중산층과 같은 삶의 기회가 동태적으로 제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도 사회적 이동성을 높일 수 있는 동태적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앞에서의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 양극화의 주된 원인은 노동공급 요인보다는 노동수요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방향 설정이 필요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양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향에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은 양극화를 글로벌 시장경제의 당연한 결과로 인정하고, 하위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근로빈곤층)의 생활수준을 개선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일자리의 질이 양극화하더라도 생활의 질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저임금일자리 계층에 대한 각종 소득보조 정책(국민기초생활 보장, 근로소득세 감면, 사회복지분담금 면제 등) 및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¹²⁾

12) EITC는 고용촉진정책의 성격은 가지지만, 사람들에게 연간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고 다른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소득을 보전해 준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제한된 의미의 부의

등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정책이다. 물론 이러한 기초소득의 보장은 저임금일자리에 대한 노동공급을 감소시킴으로써 저임금일자리를 축소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작동메커니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근로빈곤층에 소득만 보장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단순히 근로빈곤층의 소득을 보장하기보다는 근로빈곤층 일자리의 가격을 높여주는 정책이 결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빈곤층이 분명히 증가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최저임금제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정책방향은 정부정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의 형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중간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저임금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이다. 일자리 및 고용 구조는 시장의 효율적 작동의 결과만이 아니라, 세제, 교육·숙련형성 제도, 고용계약 및 근로조건에 관한 규제, 최저임금제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의 결과일 수도 있다. 정부는 중간수준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여 노동력과 일자리의 사회적 이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러한 제도들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주도의 고용창출 전략과 민간이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 제도적인 하부구조를 창출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다. 공공부문 고용창출전략은 고용창출의 방향을 개인서비스부문의 저임금일자리로부터 중간영역의 고용창출로 전환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잠재력을 개발하여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개인서비스 관련 직종의 저위일자리를 대체하는 정책적 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이다. 동시에 중간일자리 지키기 정책을 통해 일자리 줄이기 위주의 구조조정 모델에서 벗어나 경영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모델을 촉진할 필요도 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은, 일자리 및 임금 양극화의 원인이 숙련편향적 기술진보에 있다고 할 때, 숙련노동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교육훈련정책의 강화가 될 것이다. 숙련노동의 공급부족으로 인해 숙련일자리가 채워지지 못하는 숙련불일치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도 노동시장에서 중간계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

소득세라고 할 수 있다.

책 방향이다. 특히 중간일자리의 숙련불일치에 따른 일자리 감소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소득계층이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상향 이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훈련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앞서서도 보았듯이 중간계층 축소의 원인이 노동 수요 측면에 있기 때문에 숙련노동공급을 무작정 확대하는 것이 숙련노동수요를 창출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간일자리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수단은 교육훈련을 산업정책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고용주로 하여금 중간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산업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한 것이다. 제조업이나 사업서비스 부문과 같이 숙련편향적 기술변화에 따라 고용증가 형태가 J커브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 이러한 세 번째 정책 방향이 더 적절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노동시장 양극화를 매우 평면적이고 정태적으로만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중간 일자리에서 탈락할 경우 어떻게 노동시장 내외로 이동해 가는가, 고용의 양극화와 소득의 양극화는 동태적으로 어떠한 관련을 가지는지, 특정 일자리 분위 내에서의 불평등도가 더 진행되는가, 특정 일자리 자체의 질이 떨어지는가, 하위일자리 창출이 한계에 부딪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가 등에 대해서 체계적인 접근을 하지 못했다. 본 논문에서 다 다루지 못한 이러한 쟁점들은 정책적 시사점을 정확히 얻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들이지만, 향후의 연구 과제로 돌리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석훈·박찬용, 「소득분배 추정방법의 한계에 대한 고찰」, 『재정논집』 제18권 제1호,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03, pp.29-49.
- _____. 현진권, 「소득분배 관련 미시자료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한국정책학회보』 제12권 제4호, 한국정책학회, 2003, pp.201-323.
- 김영옥·민현주·김복순, 「여성노동의 양극화 추이와 과제」, 『연구보고서』 2006-14, 한국여성개발원, 2006.
- 성명제, 「소득분배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조세연구원, 2005.3.
- 신관호·신동균, 「소득분포 양극화의 특성과 경제·사회적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 제13권 제1호, 한국금융연구원, 2007, pp.63-123.
- 신동균·전병유, 「소득분포의 양극화 추이」, 『노동경제논집』 제28권 제3호, 한국노동경제학회, 2005, pp.77-109.
- 유경준, 「IMF 이후 소득분배 및 빈곤의 변화와 외국의 정책방향」, 『KDI 정책포럼』, 한국개발연구원, 2000.
- _____, 『성장, 소득불평등도와 빈곤 : 이론과 한국에의 적용』, 경제학공동학술대회, 노동경제학회 발표 자료, 2007.
- 이정우·이성림,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 1997년 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국제경제연구』 제7권 제2호, 2001, pp.79-109.
- 전광명·이해인,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이원화 실태분석」, 『조사통계월보』 12월, 한국은행, 2004.
- 조돈문, 「한국사회 계급과 계층분화: 한국사회 계급구조의 변화, 1960-1990: 계급구조의 양극화의 고찰」, 『한국사회학』 제28권 제1호, 1994, pp.1017-1046.
- 최희갑, 「외환위기와 소득분배의 양극화」, 『국제경제연구』 제8권 제2호, 2002.8, pp.1-20.
- 한상진, 「한국중산층의 개념화를 위한 시도 : 중산층의 규모와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21권 제1호, 1987, pp.1121-1148.

현진권 · 임병인, 「우리나라 소득분배 실증연구의 한계」, 『응용경제』 제6권 제1호, 한국응용경제학회, 2004, pp.49-67.

Acemoglu, Daron., “Changes in Unemployment and Wage Inequality: An Alternative Theory and Some Evidence”,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89 No.5, 1999, pp.1259-1278.

_____, “Technical Change, Inequality, and the Labor Market”,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40 No.1, 2002, pp7-72.

Autor, David H, Lawrence F. Katz, and Melissa S. Kearney, “The Polarization of the U.S. Labor Marke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6 No.2, 2006, pp.189-194.

_____, Frank Levy and Richard J. Murnane, “The Skill Content of Recent Technological Change: An Empirical Exploration”,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18 No.4, 2003, p1279-1333.

Berman, Eli., Bound John., and Zvi Griliches., “Changes in the Demand for Skilled Labor Within U.S. Manufacturing Industries: Evidence from the Annual Survey of Manufacturing”,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09 No.2, 1994, pp.367-398.

Blau, Francine and Lawrence Kahn,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Male Wage Inequality: Institutions versus Market Forc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104 No.4, 1996, pp.791-838.

Bound, John and Harry J. Holzer., “Industrial Shifts, Skills Levels, and the Labor Market for White and Black Mal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75 No.3, 1993, pp.387-396.

_____, “Demand Shifts, Population Adjustments, and Labor Market Outcomes During the 1980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18 No.1, 2000, pp.20-54.

Bluestone, Barry. and Bennet Harrison., “The Growth of Low-Wage Employment: 1963-86”, *American Economic Review* Vol.78 No.2, 1988, pp124-129.

_____, “Wage Polarization in the US and the

- ‘Flexibility’ Debat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14 No.3, 1990, pp.351-373.
- Borjas, George J., and Ramey, Valerie A., “Foreign Competition, Market Power, and Wage Inequal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10 No.4., 1995, pp.1075-1110.
- Card, David., and John E. DiNardo, “Skill-Biased Technological Change and Rising Wage Inequality: Some Problems and Puzzl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20 No.4, 2002, pp.733-783.
- Costrell, Robert M., “Methodology in the ‘Job Quality’ Debate”, *Industrial Relations* Vol.29 No.1, 1990.
- Esteban Joan-Maria., and Debraj Ray.,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ica* Vol.62 No.4, 1994., pp.819-851.
- Goos, Maarten and Alan Manning, “Lousy and Lovely Jobs: the Rising Polarization of Work in Britain”, *Review of Economics & Statistics* Vol.89 No.1, 2007, pp.118-133.
- Gittleman, Maury., and David Howell, “Changes in the Structure and Quality of Jobs in the United States: Effects by Race and Gender, 1973-1990”,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48 No.3, 1995. pp.420-440.
- Harrison, Bennett, and Bluestone, Barry., “Wage Polarization in the US and the ‘Flexibility’ Debate”,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14 No.3, 1990, pp.351-374.
- _____, Chris Tilly and Barry Bluestone, “Wage Inequality Takes a Great U-turn”, *Challenge* Vol.29 Issue 1, 1986, pp.26-33.
- Juhn, Chinhui., “Wage Inequality and Demand for Skill: Evidence from Five Decades”, *Industrial & Labor Relations Review*, Vol.52 No.3, 1999, pp.424-443.
- _____, “Wage Inequality and Industrial Change: Evidence from Five Decades”, *NBER Working Papers* No.4684, 1994.
- Kosters, Marvin H. and Murray N. Ross, “A Shrinking Middle Class?”, *Public*

- Interest* Vol.90, 1988, pp.3-27.
- Kuhn, P. and Robb A. L., “Unemployment, Skill, and Labour Supply: Evidence from Canadian Microdata: 1971-1991”, *Working Paper* No.95-11, McMaster University, Department of Economics, 1995.
- Kuttner, Robert., *The Declining Middle*, Atlantic Monthly, July 1983, pp.60-69.
- Lawrence, Robert Z, “Sectoral Shifts and the Size of the Middle Class”, *Brookings Reviews* III, 1984, pp.3-11.
- Levy, Frank, *Dollars and Dreams: The Changing American Income Distribution*, W.W. Norton & Co Inc, 1988.
- McLaughlin, D.K., “Changing Income Inequality in Nonmetropolitan Counties, 1980 to 1990”, *Rural Sociology* Vol.67 No.4, 2002, pp.512-533.
- McMahon, Patrick J. and Tschetter, John H., “The Declining Middle Class: a Further Analysis”, *Monthly Labor Review* Vol.109 No.9, 1988, pp.22-27.
- Murphy, K. and Welch, F., “Wage Differentials In The 1980s: The Role Of The International Trade”, *California Los Angeles-Applied Econometrics Papers* 23, 1990.
- Nielson Francois and Arther S. Alderson., “The Kuznets Curve and the Great U-Turn: Patterns of Income Inequality in United States Counties, 1970-9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62, 1997, pp.12-33.
- Prieto, Juan., Rodriguez. J. G., and Rafael Salas., “Polarization, Inequality and Tax Reform”, *FEDEA*, Documento De Trabajo 2003-23, October 2003.
- Rosenthal, Neal H., “The Shrinking Middle Class: Myth or Reality?”, *Monthly Labor Review* Vol.108 No.3, 1985, pp.3-10.
- Ruth, Milkman and Rachel E. Dwyer, “Growing Apart: The ‘New Economy’ and Job Polarization in California 1992-2000”, 2002.
<http://www.ssc.wisc.edu/~wright/MilkmanDwyer.pdf>
- Spitz-Oener, Alexandra, “Technical Change, Job Tasks and Rising Educational Demands:. Looking Outside the Wage Structure”,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24 No.2, 2006, pp.235-270.

- Wolfson, C. Michael., “Divergent Inequalities: Theory and Empirical Result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43 No.4, December 1997, pp.401-422.
- Wright, Erik Olin, and Rachel Dwyer, “The Pattern of Job Expansions in the
United States, a comparison of the 1960s and 1990s”, *Socio-Economic
Review* Vol.1 No.3, 2003, pp.289-333.
- OECD, “Employment in the Service Economy: A Reassessment”, *Employment
Outlook*, 2000.
- U.S.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Job Creation and Economic Opportunities:
The U.S. Labor Market, 1993-1996”, *U.S. Council of Economic Advisors*,
April 23, 1996.

Labor Market Polarization in Korea: Vanishing Middle Class?

Cheon, Byung You^{*}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in Korea focusing on the middle-class of the labor market. The job polarization and the wage polarization have been examined between 1993 and 2006. The jobs are rank-ordered in the industry-by-occupation matrixes being indexed by earnings. The middle-level jobs are defined as 25~75% of the rank-ordered jobs in the distribution of individual workers in 1993. The middle-level wage earners are defined as those earning 67~133% of median wage each year. Not only the proportion of middle-level jobs decreased from 50% in 1993 to 41% in 2006, but also that of middle-level wage earners decreased from 47% in 2000 to 43% in 2006, which evidenced the polarization of the labor market in Korea during the last decade. The causes of the job and the wage polarization could be found from the side of labor-demand rather than from the labor-supply side. The major causes would be in the de-industrialization of the economy in terms of jobs. The large scale entries into the labor market of female and youth workforce are not the major causes of the polarization. The policy responses to these polarizations will be to enhance the quality of low and middle level jobs as well as to generate the middle-level jobs.

Keywords: Employment, Income distribution, Inequality, Polarization, Middle Class

JEL Classification: J10, D30

^{*}Senior Fellow, Korea Labor Institute, E-mail: bycheon@kli.re.kr

지 정 토 론

주 제 :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 : 중간일자리 및 중간임금계층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

토론자 : 金宗勉(한국조세연구원)

최근 활발히 진행되는 소득 분배의 악화에 대한 논의는 대부분 소득 분포 또는 이의 성격을 함축하는 특정 지수 등, 소득 자체를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본 논문은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일자리를 질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 서열화하고, 각 분위의 일자리의 증감을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소득이나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는, 많은 경우 인구 연령 구조와 학력 수준의 변화 등 공급 측면에 치중하였다고 사료된다. 이는 노동시장의 공급 요인과 수요 요인을 엄격히 구분하여 분석하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특히 자료의 제약으로 인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에 비해 본 논문은 일자리 창출구조의 분석에 초점을 두으로써 노동수요의 변화를 부각하려고 노력하였다.

상술한 바와 같이 새로운 분석 방법론을 도입하여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분석이 취약했던 노동수요의 변화를 조명하였다는 점에서 본 논문은 창의성이 매우 돋보인다. 논문에 제시된 결과는 새로운 분석틀을 적용한 일차적인 결과로서도 상당히 흥미로우며, 이를 계기로 향후 후속 연구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를 보다 많이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기대가 있어, 이하의 논평에서는 보완 가능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이 전반적으로 보강될 필요가 보인다. III장에 제시된 분석 방법에 대한 설명만으로써는 논문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를 독자가 충분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우선 독자들이 일반적으로 노동시장 분석의 전문가가 아님을 감안하여, 논문에서 채택한 일자리의 분류가 어느 정도의 세세한 직업분류까지 판별할 수 있는지 구체적 예시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아울러 분석 과정에서 전체 일자리의 수효

를 몇 개로 분류했는지, 이에 따라 10분위로 일자리를 질에 따라 분류했을 때 각 분위의 일자리 수가 어떻게 되는지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독자가 분석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는 데 중요한 정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분위별 분류에 사용된 최소 관측 단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분석 방법 설명 보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문맥상으로는 분석 대상이 되는 기본 단위가 (예를 들어 근로자 개인 등이 아니라) 일자리(직업)이라고 판단되나,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개의 일자리 별로 그 질을 판별하는 평균 소득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임금 관측치를 사용했는가, 즉 각 일자리가 분석의 원자료에서 임금근로자 몇 명에 해당되는가에 따라 각 일자리의 “비중”, “가중치”, 또는 “크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분위 내의 일자리의 크기를 합산하여 각 분위의 “크기”도 생각할 수 있으며, 논문에서 분석한 일자리 창출은 결국 각 분위의 “크기”의 변화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때 크기의 변화 이외에도 분석 기간의 초·중·후반 각 시점에서 각 분위의 크기 자체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 경우 분위 크기의 변화, 즉 분위별 일자리 창출 결과를 절대 기준 이외에도 변화율로 보여줌으로써 보다 풍부한 해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분석 기간의 설정에서 외환위기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논문에서는 분석자료에서 사용된 직업·산업 분류 코드가 바뀔 때 따라 2000년을 기준으로 분석기간을 1993~2000년, 2001~2004년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분석기간을 이렇게 분할할 경우, 전자의 기간 후반부에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소득분포에 상당한 구조적 변동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간과될 수 있다.¹⁾ 즉 외환위기 이전의 변화와 외환위기 이후의 변화가 상당히 다를 가능성이 높으나,²⁾ 단지 1993년과

1) 김종면·성명재(2003)와 성명재·김종면(2004) 참조

2) 성명재·김종면(2004)에서는 학력 계층에 따른 소득분배 변화의 양상이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뚜렷한 변화를 보인다. 즉 외환위기 이전에는 지니계수가 꾸준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1980년대 후반에는 고졸 근로자의 증가에, 1990년대 중반에는 학력 계층 간 소득 수준의 격차가 감소하는 데 주로 기인하였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소득 분배가 매우 악화되는데, 학력이 낮은 계층일수록 상대적으로 소득에 큰 타격을 입었으며, 충격의 크기에서는 학력별 서열화가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소득분배가 위기 당시보다 개선되었으나 서서히 악화되는 추세에 있으며, 위기 이전과는 대조적으로 주로 학력 계층간의 수직적 분배의 악화보다는 각 학력계층 내의 소득의 수평적 분포의 악화에 기인한다.

2000년의 일자리 구조를 비교할 경우 그 효과가 혼재,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상쇄되는 효과를 읽어내기 어려울 우려가 있다.

셋째, “설명 변수”의 교차 효과를 분석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논문의 제Ⅳ장에서는 이를 시도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논문에서는 성·연령·학력·산업 등 여러 가지 “설명 변수”별로 일자리 창출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각 분석 사례별로 설명 변수 1개씩으로 국한된 one-way 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2개 이상의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교차 효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는 아쉬움이 있다. 예를 들어 90년대에 들어서까지 노동시장 신규 진입 인력 중 대졸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감안하면, 연령과 학력 양 변수 간에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는데, one-way 분석의 경우 연령의 효과와 학력의 효과가 혼재되어 있어 보다 상세한 해석과 이에 따른 정책 시사점 도출에 장애가 된다. 이를 감안하여 학력별로 표본을 분할한 후 각 분할표본에 연령별 분석을 시도하는 등, 2-way 분석을 통해 보다 세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여기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2-way 이상의 설명 변수를 이용한 분석을 수행할 경우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요인의 영향을 보다 상세히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논문의 취지를 보다 충실히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향후 연구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주제 2개를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개개의 근로자를 추적할 수 있는 패널 자료가 있는 경우, 본 논문의 일자리 분위라는 분석틀을 이용하여 근로자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자리 간에 이동하는 패턴을 추적하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 주제일 것이다. 예를 들어 중위의 일자리가 최근 감소한 것으로 본 논문이 보고하고 있는데, 그 분위에 당초 속했던 근로자들이 나중에 실제로 하위 또는 상위 일자리로 얼마나 이동하였는지, 또는 노동시장에서 탈락하였는지 추적해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하위 일자리 증가의 경우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의 맞벌이 가구 증가 추세는 고소득 가구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³⁾ 일자리 분위의 분석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성명재·김종면(2004) 참조

참고문헌

- 김종면 · 성명재, 「장기인력수급 추이에 따른 소득세원의 변화」, 『연구보고서』 03-02, 한국조세연구원, 2003.
- 성명재 · 김종면, 「부문별, 가구유형별 소득분배 구조 고찰 및 소득재분배 기능 제고방안 모색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04-03, 한국조세연구원, 2004.

지 정 토 론

주 제 :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 : 중간일자리 및 중간임금계층을 중심으로」에 대한 논평

토론자 : 李澈羲(서울대학교)

1. 분석방법에 관해

일자리를 서열화할 때 마지막 연도의 임금수준을 적용하여 서열을 정하고, 초기연도의 산업/직업 별 일자리 수를 기준으로 일자리를 10분위로 나누었다.

- (1) 마지막 연도의 임금을 적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10년 이내에 일자리별 서열구조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하기보다는 산업/직업 별 보수를 각 기간에 대해 평균하여 이를 기준으로 서열을 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
- (2) 편이의 문제 - 어떤 산업/직업의 고용이 수요 측 요인의 변화에 의해 증가했다면 그 산업/직업의 임금은 분석기간 동안 상승했을 것이다. 이 경우 고용이 증가한 산업/직업을 실제보다 상위 분위에 포함시키게 되는 문제가 있음. 공급요인의 변화에 의한 고용변화의 경우는 반대의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고용양극화의 추이와 원인에 관해

- (1) 2000~2004년의 경우 고용의 양극화가 진행되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 하위 3분위 : 443천개 증가
 - 중위 4분위 : 432천개 증가
 - 상위 3분위 : 622천개 증가

(2) 1993~2000년 기간 중 나타난 신규 고용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로 외환위기 직후의 단기적인 변화에 기인한 것인지 궁금하며, 2000~2004년 동안의 추이로 보건대 이것이 장기적인 변화의 추세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3) 공급 vs 수요 측 요인에 대한 분석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량(일자리)의 변화만이 제시되어 있고 가격(임금)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수요 측 요인에 기인하는지 공급 측 요인에 기인하는지 결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예 : “청년층이 중위일자리에서 감소하였기 때문.....” “바뀌 말하면 청년들에게 중위 일자리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그림 8> 바로 위) - 고용 감소를 수요 측 변화로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명확하지 않다. 이는 이 분위에 해당하는 산업/직업에 대한 청년들의 공급이 감소한 경우에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예컨대, 청년들의 제조업 기피현상 등).

(4) 몇 가지 해석의 문제

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 효과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성 신규고용이 전혀 없었을 경우의 일자리 증가 패턴을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전체를 본 것과는 사뭇 다른 형태가 나타난다(<그림 7> 참조).

① 1993~2000년 : 남성만 보아도 양극화 현상은 나타나지만, good jobs의 증가(약 35만)가 bad jobs의 증가(약 27만)를 능가하고 있다.

② 2000~2004년 : 양극화는 완전히 사라진다.

- 하위 3분위 : 약 8만개 증가
- 중위 4분위 : 약 15만개 증가
- 상위 3분위 : 약 40만개 증가

2) 청년 및 노인 고용패턴 변화

1993~2000년 기간은 고용양극화의 매우 중요한 원인임. 30~49세만 본다면 (<그림 8> 참조), 5~6분위의 고용증가가 매우 부진한 것이 사라지지 않기는 하지만 양극화의 정도가 매우 약해진다.

3) 일자리 변화의 평가

- ① 하위 일자리의 증가 성격 : 1993~2004년 동안(특히, 2000년 이후), 대체로 여성, 고령자, 저학력, 비정규직, 서비스업 일자리 증가에 크게 기인한다. 2000년 이후로는 파트타임 고용의 증가도 중요했다. 이 가운데는 한계근로자 내지 secondary earners가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일자리의 양극화가 가구소득의 양극화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 ② 중위 일자리 감소의 성격 : 고졸 이하, 30세 미만, full-time, 정규직, 제조업 일자리의 감소에 기인한다.
- ③ 상위 일자리 증가의 성격 : 고학력, 장년층, 남성, 정규직, full-time, 서비스업 일자리가 증가되었다.

종합적으로 보건대, 제조업의 쇠퇴, 청년 일자리 감소, 비정규직의 확대, 저임금 직종 여성 및 고령인력 공급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조정의 결과로 인한 중·장년층의 실직과 이들의 저임금, 비정규직 이동과, 가계수입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여성의 저임금, 비정규직, 파트타임 업종 진출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다.

3. 정책적인 함의에 관해

(1) 제시된 정책

- 1) 고용의 질은 놓아두고 소득보전을 해 주는 정책. 이는 충분하지 않고 일자리 가격을 높여주는 최저임금제와 같은 제도가 함께 보완되어야 한다.

- 2) 중위수준 일자리를 유지하고, 저소득 개인서비스를 중위소득 사회서비스 일자리로 대체
 - ① 정부부문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②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 3) 교육정책과 산업정책의 연계, 고용주가 중간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2) 의문점들

- 1) 대중요법 - 노동시장 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간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경제적,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 이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경직성의 문제, 각종 규제문제를 함께 거론해야 하지 않을까?
- 2) 정부부문이 중간 정도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까? 비용과 부작용의 문제는?
- 3)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지키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유인은 무엇일까?
- 4) 더 나은 일자리의 창출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의 trade-off 문제
 - 1996~2000년 가계소득불평등도 확대요인 분석 결과(다음의 <그림>과 <표>를 참조) : 임금의 변화가 역시 가장 중요(거의 60% 설명)하다. 그러나 고용의 중요성도 크다. 예컨대, 최상 10분위와 최하 10분위 가구소득 격차 증가의 거의 20%가 고용주의 고용 및 근로시간 격차 확대에 의해 설명된다. 또한 저소득층 배우자들의 노동공급 증가는 소득격차를 13% 낮추는 역할을 했다.

(3) 몇 가지 제안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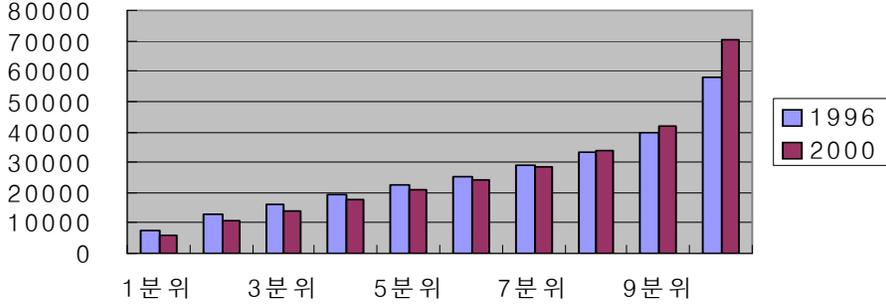
- 1) 시기를 1993~1997년, 1997~2000년, 2000~2004년으로 나누어 분석한다면 외환위기로 인한 단기적인 변화의 효과를 더 잘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2) 각 일자리 분위에 해당하는 산업/직업 cell을 부표로 제시하면 어떤 경제적인 변화 때문에 일자리 양극화가 나타났는지를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이다.
- 3) 정책적인 처방과 관련해서는 예를 제시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1996~2000년 사이 가구 소득 불평등의 변화 분석 : 최상위 분위와 최하위 분위 간의 소득 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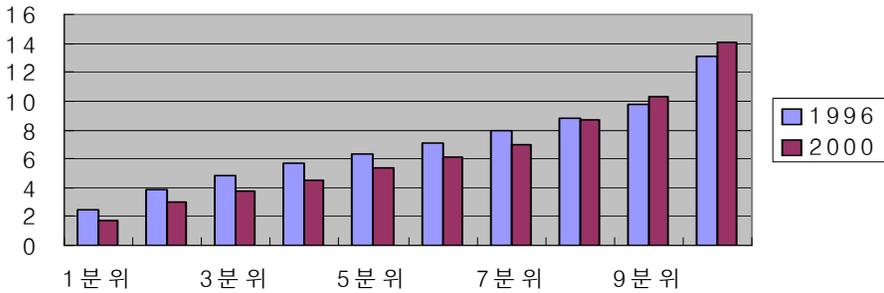
변 수	18~64세 근로자가구		18~64세 전체가구	
	추계치	기여도(%)	추계치	기여도(%)
(1) ΔN^*	0.4562	1.0000	0.4997	1.0000
(2) $\Phi_h \Delta H_h^*$	0.0340	0.0745	0.0329	0.0658
(3) $\Phi_h \Delta W_h^*$	0.2518	0.5520	0.3262	0.6527
(4) $\Phi_h P_h^*$	0.0546	0.1197	0.0399	0.0798
(5) $\Delta \Phi_h (H_h^* + W_h^* + P_h^*)$	-0.1776	-0.3894	-0.1697	-0.3396
(6) $\Phi_s \Delta H_s^*$	-0.0117	-0.0256	-0.0125	-0.0249
(7) $\Phi_s \Delta W_s^*$	0.0134	0.0293	0.0144	0.0288
(8) $\Phi_s \Delta P_s^*$	-0.0468	-0.1025	-0.0256	-0.0511
(9) $\Phi_s \Delta \delta_s^*$	-0.0098	-0.0214	-0.0104	-0.0208
(10) $\Delta \Phi_s (H_s^* + W_s^* + P_s^* + \delta_s^*)$	0.0097	0.0213	0.0215	0.0431
(11) $\Phi_q \Delta Q^*$	0.1168	0.2559	0.1018	0.2037
(12) $\Delta \Phi_q Q^*$	0.1750	0.3835	0.1392	0.2786
(13) ϵ	0.0469	0.1027	0.0419	0.0839
가구주의 노동 : (2)+(4)	0.0886	0.1942	0.0728	0.1456
배우자의 노동 : (6)+(8)	-0.0585	-0.1282	-0.0380	-0.0761
총 노동공급	0.0301	0.0661	0.0348	0.0696
전체임금 : (3)+(7)	0.2652	0.5813	0.3406	0.6815
가족 구조 : (9)	-0.0098	-0.0214	-0.0104	-0.0208
기타 소득 : (11)	0.1168	0.2559	0.1018	0.2037
소득구성변화 : (5)+(10)+(12)	0.0070	0.0154	-0.0089	-0.0178
합 : (2) - (12)	0.4094	0.8973	0.4578	0.9161

<18~64세 근로자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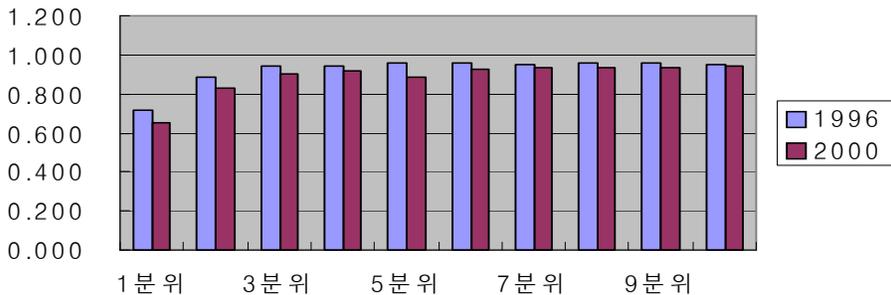
<그림 1> 평균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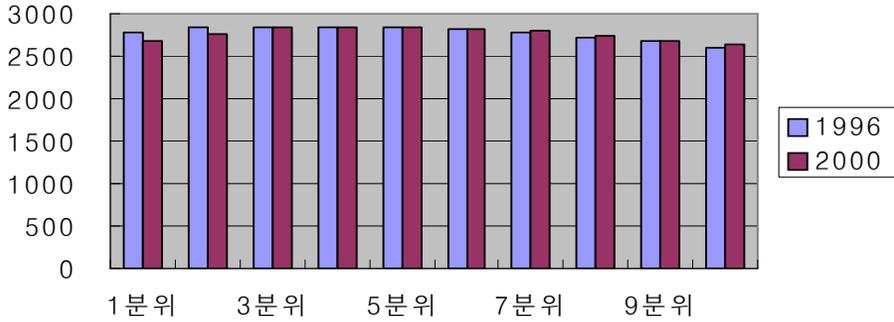
<그림 2> 고용된 가구주의 평균시간당 임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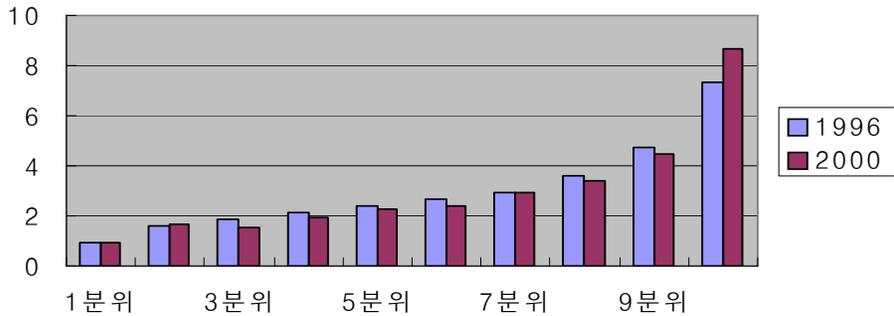
<그림 3> 가구주의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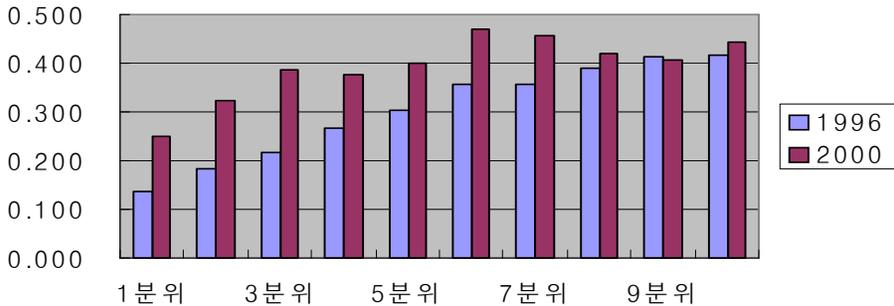
<그림 4> 고용된 가구주의 연간 근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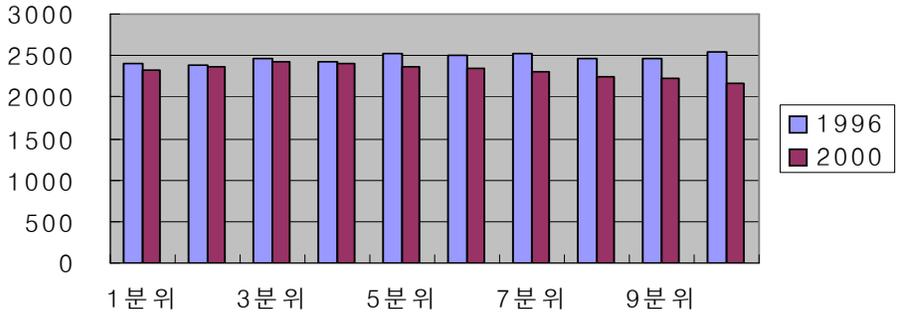
<그림 5> 고용된 배우자의 평균시간당 임금



<그림 6> 배우자의 고용률



<그림 7> 고용된 배우자의 연간 근로시간



일 반 토 론

주 제 : 『한국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 : 중간일자리 및 중간임금계층을 중심으로』

김용진(아주대) : 이철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좀더 이야기해 보면 연구기간 동안의 IT관련 부분이 산업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고 서비스 부분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비즈니스 부분에서는 숙련노동자의 수요가 늘었고 개인서비스는 미숙련노동자의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조와 부합하는지를 더 보여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직업을 분위별로 나누었을 때 그러한 분류가 기업 입장에서 보았을 때 영업이익률이 달라질 유형들을 살펴보면 노동수요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분위별로 나누었을 때 평균적인 교육수준을 봄으로써 기업의 일자리가 요구하는 교육수준 등을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관호(고려대) : 소득 대신에 일자리를 본 것이 특이하고 큰 공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 대신 일자리를 보았을 때는 일자리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소득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이 일자리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소득을 쓰셨고 소득이 고정되었다고 가정한 것이 처음에 일자리를 사용한 유용성을 많이 떨어뜨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지만(상명대) : 본 논문에서 산업과 직업으로 분류한 뒤 셀을 만들어서 평균 임금을 구하실 때는 말년도의 임금을 이용하셨고 평균임금을 가지고 10분위로 할 때는 초기연도의 임금을 이용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 함으로써 양극화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질문 드립니다.

김종면(조세연구원) : 정지만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같은 맥락에서 초기 연도와 말년도의 평균임금 수준 두 개를 구하면 변화율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도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유(답변) : 미흡한 논문을 발표하게 돼서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2000년부터 소득에 대한 자료가 집계되었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 분석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소득변수가 아닌 교육변수의 경우는 이전 자료가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고 직업·산업 셀에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도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좀더 검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초 자료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는데 직업-산업 셀로 하면 870개 정도 나옵니다. 10개 미만으로 셀이 나오는 경우는 삭제했고 셀의 평균임금이 아닌 중간임금(median wage)을 사용했습니다. 현재 평면적인 분석만 했기 때문에 조금 전 지적하셨던 대로 좀더 나아가는 분석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룹 내에서의 변동성 문제, 패널 자료를 사용한 동적인 분석 그리고 통계청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면 가계 조사를 함께 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철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자리에서 소득으로 넘어가고 복지까지 가는 과정에는 상당히 복잡한 이론이 있기 때문에 일자리만으로 빈곤에 대한 대응정책을 고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고용에서 복지로 가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이 정책부분에서 고용의 양과 질에 관련된 논쟁은 중요하며 크게는 OECD와 EU의 입장이 다르고 미국모델과 유럽모델이 다릅니다. 이철희 교수님께서 제시하셨던 <표>는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고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저소득층의 고용률이 떨어지면서 과연 빈곤이 더 심화된 것이 아닌가라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외환위기 이후에 고용률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주로 고학력 일자리만이 만들어지니까 청년층이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아서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시하신 <표>를 보니까 고령자가 많을 것이라 생각되는 저소득층의 고용률이 떨어지면서 그것이 빈곤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위별 기초자료를 하면서 어떠한 직업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시간 제약으로 하지 못한 점이 아쉽고 앞으로 좀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